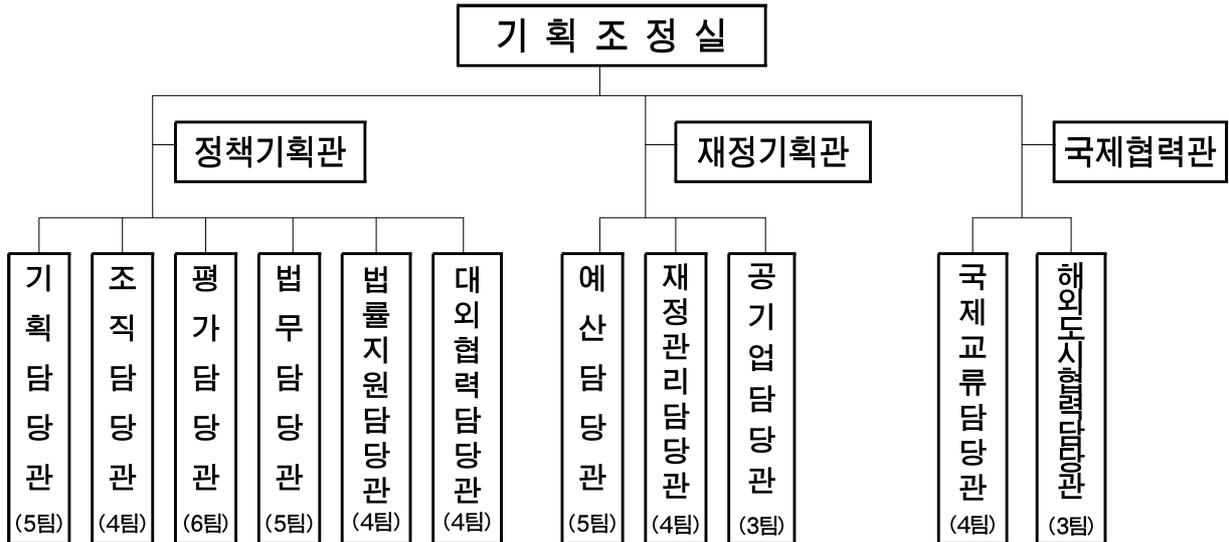

주요 업무 보고

2016. 3.

기 획 조 정 실

I. 일반 현황

조 직 1실, 3관, 11담당관, 47팀, 1직속기관 · 1출연기관



- 직속기관 : 시립대학교(7대학 9대학원 6처)
- 출연기관 : 서울연구원(1본부 6연구실 3센터)

인 력 273/269명(정원/현원)

(’16. 2. 24. 현재)

구 분	합 계	일반직	임기제	별정직	관리운영직
계	273 / 269	230 / 229	35 / 32	1 / 1	7 / 7
기 획 담 당 관	32 / 33	29 / 31	2 / 1		1 / 1
조 직 담 당 관	30 / 29	28 / 27	1 / 1		1 / 1
평 가 담 당 관	35 / 33	32 / 31	1 / 1		2 / 1
법 무 담 당 관	26 / 26	24 / 24	1 / 1		1 / 1
법 률 지 원 담 당 관	24 / 23	9 / 9	14 / 13		1 / 1
대 외 협 력 담 당 관	20 / 20	17 / 17	3 / 2		/ 1
예 산 담 당 관	32 / 32	31 / 32			1 /
재 정 관 리 담 당 관	21 / 21	20 / 19	1 / 1		/ 1
공 기 업 담 당 관	15 / 15	14 / 14	1 / 1		
국 제 교 류 담 당 관	23 / 22	16 / 15	6 / 6	1 / 1	
해 외 도 시 협 력 담 당 관	15 / 15	10 / 9	5 / 5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기 획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정현안사항 기획·조정 ○ 국회·시의회 관련 업무, 공약총괄 관리 등
조 직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민간위탁 업무, ○ 사무위임전결, 지방분권 업무 및 직무발명 등
평 가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 주요사업·시책 평가 및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등
법 무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법규 제·개정, 규제개혁 ○ 행정심판, 소청심사 운영
법률지원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총괄, 주요 시책사업 법률자문, 계약(협약) 심사 ○ 서울시공익변호사단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등
대외협력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등 대외기관 협력관련 업무 총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역발전위원회 업무 등
예 산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 및 운용·관리, 중기재정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관리, 예산성과금 업무 등
재정관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투자심사, 시 민자사업 관리, 기금운용·관리 업무 총괄 ○ 시·투자출연기관 통합재정관리, 주민참여예산제 등
공 기 업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 투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부채관리 등
국제교류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 계획 수립 ○ 자매우호도시 등 외국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해 외 도 시 협 력 담 당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정책 해외공유 전략수립 및 조정·지원 총괄 ○ 국제기구 유치·협력사업 추진 및 국제회의 참가 등

예산 총 규모 : 1조 4,341억원

○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사업수)	2016년 (사업수)	증 감
합 계	1,724,101 (72)	1,434,065 (80)	△290,036
일반회계	481,630 (53)	437,449 (62)	△44,181
도시개발특별회계	185,148 (1)	177,843 (-)	△7,305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77,670 (-)	316 (-)	△177,354
기금	879,653 (18)	818,457 (18)	△61,196

○ 일반회계 : 총 4,375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사업수)	2016년 (사업수)	증 감
합 계	481,630 (53)	437,450 (62)	△44,181
기획담당관	1,027 (3)	1,256 (4)	229
조직담당관	20,982 (9)	73,837 (12)	52,855
평가담당관	1,733 (6)	1,858 (7)	125
법무담당관	386 (3)	539 (3)	153
법률지원담당관	3,956 (2)	6,089 (2)	2,133
대외협력담당관	4,562 (5)	4,254 (6)	△308
예산담당관	424,532 (5)	164,214 (3)	△260,318
재정관리담당관	15,187 (5)	174,862 (8)	159,675
공기업담당관	2,120 (4)	1,525 (5)	△595
국제교류담당관	2,238 (6)	2,552 (5)	314
해외도시협력담당관	4,907 (5)	6,463 (7)	1,556

○ 도시개발특별회계 : 총 1,778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사업수)	2016년 (사업수)	증 감
예산담당관	185,148 (1)	177,843 (1)	△7,305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 총 31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사업수)	2016년 (사업수)	증 감
재정관리담당관	177,670 (-)	316 (-)	△177,354

○ 기금 : 총 8,185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사업수)	2016년 (사업수)	증 감
합 계	879,653 (18)	818,457 (18)	△61,196
재정투융자기금	842,405 (-)	629,087 (-)	△213,318
감채기금	17,290 (-)	167,578 (-)	150,288
남북교류협력기금	11,364 (1)	11,477 (1)	113
대외협력기금	8,594 (17)	10,315 (17)	1,721

※ 사업수는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등 제외

II. 정책 목표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

시정성과 창출 및 체계적 정책조정

민 선 6 기
시 정 성 과
창 출
지 원

시 민 권 의
향 상 을
위 한
제 도 개 선

건 전 재 정
실 현 을
위 한
재 정 혁 신

교 류 협 력 을
통 한
서울의 위상
제 고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민선6기 시정성과 창출 지원

- ① 시정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조정 및 지원 강화
- ② 시정역량 강화를 위한 적정조직 확보 추진
- ③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기반 강화
- ④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 ① 시민이 공감하는 지방분권 추진
- ② 협치 친화적 민간위탁 혁신
- ③ 시민체감형 규제개혁 추진
- ④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강화
- ⑤ 서울시 마을변호사 확대 운영

3. 건전재정 실현과 시민참여 확대

- ① 서울형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 ② 예산성과금 지급제도 정비·개선
- ③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
- ④ 시 및 투자·출연기관 부채·채무 감축 추진
- 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비보조금 관리개선
- ⑥ 투자·출자·출연기관 협력 및 소통 강화
- ⑦ 투자·출연기관 컨설팅 추진 및 사후관리 강화
- ⑧ 노사정 서울협약 이행을 통한 일자리창출 실현

4. 교류협력에 기반한 서울의 위상 제고

- ① 타 지자체·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상생 실현
- ② 전략적 도시외교를 통한 글로벌 소통 강화
- ③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제도 확대 및 활성화
- ④ 서울형 우수정책 해외진출
- ⑤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1. 민선6기 시정성과 창출 지원

① 시정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조정 및 지원 강화

② 시정역량 강화를 위한 적정조직 확보 추진

③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기반 강화

④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

1 시정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조정 및 지원 강화

시정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정책조정 강화 및 조직·법무·예산 등 종합적 지원기능을 활성화하여 시정 성과 극대화

시정 주요 정책·현안 조정 활성화로 시정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 시정성과 제고가 필요한 정책분야 발굴 및 주요사업 성과 점검
- 부서간 협업·협력 활성화 및 중요 사안의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 다부서 연계 사안의 경우, 기초실 주도로 총괄 조정 및 대안 도출

사업부서에 대한 지원 확대

- 정책조정·조직·법률지원·예산·대외협력 등 분야별 지원 강화
- 시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기능 확대로 시정 성과 극대화

정 책 조 정

- ▶ 부서간 협업·정책조정·의사결정 지원
- ▶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컨설팅 강화

법 률 자 문

- ▶ 주요 시정분야별 전담 변호사 지정으로 법률지원 강화
- ▶ 중요사업 전 과정에 대한 선제적 법률서비스 제공

조 직 정 비

- ▶ 핵심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기구 신설, 신속한 정원 조정
- ▶ 학술용역 등 시정연구 기능, 민간위탁, 직무분석 등

예 산 지 원

- ▶ 주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필요 예산 적기 지원
- ▶ 사업부서 지원을 위한 전용·변경 등 예산의 탄력적 운영 지원

대 외 협 력

- ▶ 시의회·국회·정부·타지자체 등과의 정책네트워크 강화
- ▶ 국고보조금 등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정부 지속 설득

향후계획 : 실·본부·국 간 정책조정 및 총괄 지원 시행('16.1월~계속)

2 시정역량 강화를 위한 적정조직 확보 추진

서울시 본청 조직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정규기구를 확대하여, 민선6기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조직 적시 보강

추진목표

-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실·본부·국 수 확대 : 現 17개 → 22개
- 3·4급 복수직급제 확대 : 現 3·4급 복수직급 직위 5개 → 주무과장 22개

조직진단 연구용역 개요

- 수행기간 : '15. 7. 31. ~ '15. 11. 30.(4개월)
- 용역내용 : 본청 적정 기구 규모 도출 및 조직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
- 용역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소요예산 : 49백만원 ※ 예산사업명 : 시정시책연구용역

연구결과

- 본청 적정 공무원 수 : 3,694명~3,896명
※ 2013년 기준, 실제 공무원 수 3,904명과 5% 오차범위 내 수준임
- 적정 기구 수 : 22개
 - 조직진단 용역결과 22~28개 기구가 요구되나, 공공조직의 기구증설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22개가 타당
- 3·4급 복수직급제 활성화
 - 조직 유연성과 성과향상을 위해 복수직급제 관련 규정을 최소한 중앙부처 소속기관의 기준범위와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개정 필요
※ 중앙부처 소속기관의 복수직급은 4급 직위의 15% 범위 내에서 운영

향후계획

- 적정 기구 수 확대 관련 행정자치부 협의 추진 : '16. 2~
 - 기구정원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실·본부·국 수 및 복수직급제 확대

3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기반 강화

‘지속가능성’을 서울시정의 핵심원칙으로 설정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이 시정 전반에 확산되도록 기반 조성

□ 추진목표

- 시정 전반에 걸쳐 ‘경제발전’, ‘사회 안정과 통합’, ‘환경보전’ 등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오경환 의원 개선요구 사항(’15. 11. 24)〉

- ▶ 서울시의 선도적인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건의

□ 사업개요

○ 주요내용

- 시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심의·자문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실행력 확보로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기반 마련
- UN 17개 개발목표와 市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통합적 접근

- 소요예산 : 총 141백만원 ※ 예산사업명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 추진실적 및 실태

- 「市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 ’13. 5.
- 「市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40명) 및 운영 : ’13. 9.
- 「市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 ’15. 4.
- 지속가능발전 시범평가 : ’15. 3.~10.
- 제2기 「市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40명) 및 위촉 : ’15. 11.
 - 구 성 : 40명(공동 위원장 : 시장 및 문태훈 교수, 위촉직31, 당연직 9)
- 제2기 「市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워크숍 : ’16. 1.

- 제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로드맵 공유
- 2016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중점 추진과제, 운영방안 논의 및 학습

〈 보완 필요사항 〉

- 기본계획 실행력 확보 위해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이행계획 수립
- 주요 정책의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정의 지속가능발전 내재화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을 통한 추진체계 강화 지원

□ 개선/보완 계획

- 서울형 이행계획 수립 위한 UN 연계성 검토 및 지침 마련 : '16.3.~10.
- 정책의 지속가능성 검토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 '16.3.~ 11.
-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추진 TF 운영 : '16.3.~12.
 - 지속위 중심으로 조례안 마련을 위한 협치 거버넌스 운영 및 공론화
 - 지속위 심의·확정(10월), 조례안 상정('17. 1월) 목표

◇ 희망서울 생활지표 정비

〈최호정 의원 개선요구 사항('15. 11. 30)〉

- ▶ 생활지표 필요성 재검토 및 서울정보데이터광장과 중복되는 부분 정비

○ 추진실적

- 지표 수용자인 서울시민 관점에 맞는 체감형 생활지표로 개선·보완
- 지표 체계 재설계(15개 분야 300개 지표 → 9개 분야, 88개 지표)
 - 중복 지표(85개 → 48개) 대폭 축소 및 신규지표(20개) 발굴

○ 개선/보완 계획

- 재정비 지표(신규 20개, 보완·정비 68개)에 대한 실적 등록 현행화
- 지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온라인 공개시스템 개선을 통해 시민 알권리 보장
 - ※ 희망서울 생활지표 시민보고서 발간 : '16. 6월

4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

취약부분 선제적 대응 등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내실 있는 대응체계 가동을 통해 우리시 위상에 걸맞는 평가실적 제고

□ 추진목표

- 전년도에 이어 상위권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저평가 지표 중심으로 집중관리 및 자체평가시스템(SVPS)을 통한 실적관리 강화

※ SVPS(Seoul Virtual Policy Studio) : 서울행정평가정보시스템

〈오경환 의원 개선요구 사항('15. 11. 19)〉

- ▶ 정부합동평가 결과에서 보건위생분야가 지속적으로 '다' 등급을 받는 등 저평가되는 분야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평가개요

- 근거/주관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 행정자치부
- 대 상 :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무, 국가주요시책
- 기 간 : 전년도 실적 기준, 상반기 평가 실시('16. 1~6월)
- 분 야 : 9개 분야, 27개 시책, 196개 세부지표
〈9개분야〉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가족,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 방 법 : 市部(8개), 道部(9개)로 구분하여 가/나/다 등급 평가

□ 추진실적 및 실태

○ 8개 특별·광역시 중 공동 2위 달성(서울·부산·울산)

- 가등급 4개(전년 대비 2개 증가), 나등급 4개(전년과 동일), 다등급 1개(전년 대비 2개 감소)으로 전년('14년, 4위) 대비 평가순위 2단계 상승

구 분	2015	2014	2013	2012
등급 및 개수	가 - 나 - 다 (4) (4) (1)	가 - 나 - 다 (2) (4) (3)	가 - 나 - 다 (1) (1) (7)	가 - 나 - 다 (1) (6) (2)
'가'등급 분야	복지사회, 지역경제, 문화여성, 환경산림	문화관광, 중점과제	문화관광	일반행정
'나'등급 분야	일반행정, 지역개발, 안전관리, 중점과제	일반행정, 지역경제, 지역개발, 안전관리	지역개발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관광, 환경산림, 중점과제
'다'등급 분야	보건위생	사회복지, 보건위생, 환경산림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사회복지, 안전관리
평가순위 (市部)	상위권 (2위)	중위권 (4위)	하위권 (7위)	하위권 (7위)

- 3년 연속 '다'등급을 받은 보건위생분야의 경우 정성평가 성적은 우수한 반면 정량평가는 부진한 실정인데, 이는 지표 설정 및 평가 산식부터 대도시 특성이 미반영된 점이 크게 작용함

□ 개선/보완 계획

○ 우리시에 불합리한 평가지표 적극 발굴·변경 요청

- 인구 수, 업소 수 등 대도시 특수성으로 인해 실적제고에 한계가 있는 지표에 대해 보정계수, 합리적 지표로 대체 등 변경 요구
(시 주관부서 → 관련 중앙부처, 평가담당관 → 행정자치부)

○ 자체 평가시스템을 활용한 정기적 실적점검 실시('16. 8월, 10월)

- 서울시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SVPS)을 활용하여 해당 실·본부·국 및 자치구 대상, 모의 합동평가 수준의 점검을 통해 선제적 실적관리 강화

2. 시민권의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① 시민이 공감하는 지방분권 추진

② 협치 친화적 민간위탁 혁신

③ 시민체감형 서울시 규제개혁 추진

④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강화

⑤ 서울시 마을변호사 확대 운영

1 시민이 공감하는 지방분권 추진

지방자치 실시 20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정부의 자율권은 제약되어 있어, 시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추진

□ 추진목표

2015년 지방분권 논의 기틀 마련 ⇨ 2016년 지방분권 운동 본격 확산

〈박양숙 의원 개선요구 사항('15. 11. 24)〉

- ▶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관련 쟁점이 증가하고 있음
- ▶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연대활동 필요

□ 사업개요

- 목 적 : 지방분권 확대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15.4.2.)
- 주요내용 : 지방분권 공감대 형성, 지방분권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 소요예산 : 총 190백만원 ※ 예산사업명 :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 추진실적 및 실태

-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서울시 추진체계 구축
 -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5.4.)
 - '지방자치 서울 추진단' 구성·운영('15.8), 서울 지방분권 핵심과제 선정
-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시, 지방분권 촉구를 위한 시도지사 공동선언
 - '지방자치 20년, 주민에게로의 지방자치를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15.9.)
-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지방분권 국제포럼 개최
 - '지방자치 날개를 펴다'를 주제로 자치입법·조직·재정 세션별 토론('15.10.)
- 서울특별시 지방분권협의회 출범
 - 위원장 포함 18명 구성·위촉('15.12.)을 통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 보완 필요사항 〉

- 지방분권을 ‘관 대 관 문제’로 인식하여 시민 관심 및 공감대 부족
 -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행정자치부, '15.7)
 - 1) 자치권이 미흡한 이유 : 지방정부 역량부족(34.1%)
 - 2) 재정분권이 미흡한 이유 :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54.2%)
- 지방자치발전위원회(대통령 소속)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발표('14.12.)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부족

□ 개선/보완 계획

- 시민 중심의 지방분권 공감대 조성
 - 서울시 지방분권 촉진·지원 추진계획 수립(4월~)
 - ▶ 지방분권 목표, 추진방향, 지방분권 과제 발굴, 실행계획 등 마련
 -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지방분권’ 주제 백서·홍보동영상 제작(5월~)
 - ▶ 지방자치 현 실태, 지방분권이 필요한 사례, 해외 우수사례 등 수록
 -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기념행사 개최(10월)
- 서울형 지방분권 선도모델 ‘자치영향평가제도’ 본격 시행
 - 市 정책 수립·시행 시 예상되는 자치구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협의·조정
 - ▶ 영향 평가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로 ‘서울시 자치영향평가협의회’ 운영
 - '16년 자치영향평가 시범 실시 후, 법·제도적 근거 마련
- 서울형 지방분권 선언을 위한 ‘지방정부 자치헌장 조례’ 제정
 - 지방자치 기본이념을 담은 헌법정신 구현을 위한 선언적 규범 마련
 - ▶ 지방자치 이념, 방향 설정, 지방자치단체 책무, 주민의 역할 등 명시
- 지방분권 협력네트워크 활성화로 지방분권 운동 확산
 - 당정협의회 등 연계, 국회·정당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제화 촉구
 - 서울지방분권협의회를 주축으로 타 지자체 지방분권협의회와 공동 연대
 - 행정자치부-市 정책협의네트워크 구성·운영을 통한 소통 강화
 - 지방행정연구원 공동연구를 통한 서울형 지방분권 논리 강화

2 협치 친화적 민간위탁 혁신

현행 민간위탁제도 및 운영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혁신방안 마련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 추진목표

2015년 위탁의 공정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2016년 수탁기관 고용 안정 및 민간위탁 과정별 혁신

- 수탁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동반자 관계 구축 및 종사자 고용안정화 도모
- 민간위탁 선정절차 투명성 제고 및 위탁사무 심의·평가 등 관리체계 강화

〈김용석·김종욱·박양숙·오경환 의원 개선요구 사항('15. 11. 24)〉

- ▶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개선(선정과정의 공정성, 평가·관리 강화 등)
- ▶ 대행사업과 위탁사업 구분 필요

□ 추진실적 및 실태

- 민간위탁 종합 개선계획 추진으로 제도적 기반 강화
- 종합성과평가제 및 회계감사제 도입('15.1)으로 사무의 성과제고 및 내실화

※ 민간위탁사무 현황('16.2.1.기준)

(단위 : 건)

계	예산지원형			수익창출형
	소 계	시 설	사 무	
347	315	212	103	32

〈 보완 필요사항 〉

- 수탁기관과의 소통 부족 및 고용불안 해소 위한 실효적 실행방안 부족
- 심의·관리·평가 등 추진과정별 문제점 내재 및 사회적 책임성 부족

□ 개선/보완 계획

○ 수탁기관과 협치시스템 구축

- 수탁기관, 전문가, 사업부서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종합개선 TF 운영('16.2~)
- 유형별·분야별 '수탁기관 협의체' 운영(분기1회)으로 지속적 제도 보완('16.3~)
- 서울시 및 수탁기관 간 정보·사례 공유 및 소통을 위한 플랫폼 구축('16.3~)

○ 수탁기관 종사자 고용안정화

- 정규직 비율 연차별 상향
 - ▶ 연차별 계획 : 80.2%('15) → 81%('16) → 82%('17) → 83%('18)
- 수탁기관 종사자 고용유지·승계 여부 협약서상 '노력'에서 '의무'로 강화
- 생활임금(기본급+교통비+식대) 적용 추진으로 수탁기관 종사자 임금 현실화
 - ▶ 생활임금 보장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방계약법 개정안('15.8.17.) 계류중

○ 민간위탁 심의·관리·평가 내실화

구 분	개 선 방 안
선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적격자심의위원회 제척·기피·회피규정 강화·신설 ▶ 실·국별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Pool 구성 및 현장 실무전문가 비중 확대 ▶ 적격자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
운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금 신규 편성 시 사전 민간위탁 심의 및 의회 동의 의무화 ▶ 사업계획 변경 시 예산규모·성격에 따라 통계목내 변경 후 사후보고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 및 참여 유도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시설·사무·중간지원조직형)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개발 ▶ 종합성과평가 근로여건(정규직 채용 등) 지표 배점 상향(2→5점) ▶ 장기·다수 수탁사무 특정감사 실시 및 종합성과평가 대상사무 성과점검 제외

□ 향후계획

- 민간위탁 조례·시행규칙 및 관리지침 개정 : '16. 3~6월

3 시민체감형 규제개혁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실사구시형 규제개혁 추진

추진목표

- 경제 활성화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 지속 추진
- 안전 등 꼭 필요한 규제는 계속 유지하면서 기존 규제 재검토 및 합리화
-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발굴·개선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개요

- 목 적 :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편익 증대
- 주요내용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공개 규제법정 개최, 시민아이디어 공모 등
- 소요예산 : 총 49백만원 ※ 예산사업명 :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추진실적 및 실태

- 푸드트럭 유치 : 68대 유치(상시 14대, 한시 54대)
- 규제개선(안) 발굴
 - 도시·주택·건축분야 : 50선(市 17건, 정부건의 33건)
 - 정부법령개선 건의 : 233건(市 28건, 자치구 205건)
 - 지방규제 정비추진(자치법규) : 총 404건 발굴(295건 완료)
- 민-관 협업을 통한 규제 개혁 추진
 - 상공회의소 협업 체계 구축, 경영애로사항 청취

〈 보완 필요사항 〉

- 규제개혁 시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시민생활 속 규제 발굴 미흡
- 소관부서의 규제개혁에 대한 소극적 형태로 시민체감도 저조

□ 개선/보완 계획

○ 분야별·권역별 특화규제 책임 발굴·개선제 추진

- [본 청] 실·본부·국별로 개선 과제 : 각 20건 발굴
 - ▶ 규제개혁 추진 T/F 및 실·본부·국장 회의를 통해 추진사항 관리
- [자치구] 구별 특화규제 및 일반규제 : 각 10건 발굴
 - ▶ 구별 특성(IT, BS, 패션디자인, 바이오메디컬, MICE, 문화, 관광)을 반영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구청장(부구청장) 회의를 통해 추진사항 관리
- [민 간]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음부즈만 등과 MOU 체결 개선과제 공동 발굴

○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 푸드트럭 영업규제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 ▶ 영업장소 확대 : 8개소 → 13개소 (5개소 확대)
(문화시설, 관광특구, 도로, 공공기관 행사, 공공 시설 또는 장소 등)
 - ▶ 영업희망자에게 영업장소 지정 신청권 부여 등
- 공용재산 활용 통합공모 실시('16. 5월 식품안전과)
 - ▶ 청년창업 활성화 및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계 수단 지원 등
- 불법 노점과의 차별화를 위해 푸드트럭 실명제 도입

○ 서울시 규제개혁의 추진방향 제시를 위한 규제지도 작성

- 서울시 규제법령 및 분야별 규제현황을 총괄 파악, 경제활동 및 시민생활에 끼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
 - ▶ 용역 발주 및 계약 체결 : '16. 3월 / 결과 보고 : '16. 9월

○ 공개 규제법정 개최 정례화 : 분기별 1회

- 주민 숙원 미해결 규제, 기업활동 제약 규제 등으로 안전 선정
- 이해당사자(시민, 공무원)와 배심원단(시민, 전문가)으로 법정 구성
- 추진일정 : 제2회('16. 5월), 제3회('16. 8월), 제4회('16. 11월)

○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생활 속 규제 시민 공모('16. 2.3. ~ 2.24.)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20건을 선정 후 행자부 전국 경선에 제출

4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구제 강화

시민지향적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침해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 도모

□ 추진목표

- 행정심판 재결기간 단축(98일 ⇒ 80일)
 - 행정심판 청구 증가로 인한 재결기간 지연 대책을 마련하여 효율적 사건 처리와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 도모

〈최호정 의원 개선요구 사항('15. 11. 19)〉

- ▶ 행정심판재결 기간 단축에 대해 보다 현실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사업개요

- 설치근거 : 행정심판법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 위원정원 : 30명 이내(내부위원 5명, 외부위원 25명)
- 위원회 구성 : 매회 8명(위원장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외부위원 6명)
- 회의개최 : 매월 2회(1, 3주 월요일 또는 2, 4주 월요일)
- 심판대상 : 구청장과 사업소장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
- 소요예산 : 총 215백만원 ※예산사업명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추진실적 및 실태

- 최근 3년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현황
 - 행정심판 청구건수 급증 : 전년도 대비 32% 증가('14 : 1,298건 ⇒ '15 : 1,715건)

※ 행정심판 청구 현황('14~'16.2월)

연도	청구 건수	분 야 (건)						
		보건복지 (일반음식점, 장애, 여성가족 등)	건설교통 (이행강제금, 주택, 운수과징금 등)	문화관광	산업자원	정보공개	환경	기타
2016.2월	162	59	42	7	0	30	0	9
2015	1,715	687	583	83	14	257	10	81
2014	1,298	587	439	47	20	115	6	84
2013	1,189	534	485	57	21	30	0	62

— 심판청구 증가에 따라 재결건수 22% 증가('14년 : 1,115건 ⇒ '15년 : 1,363건)

※ 행정심판 재결 현황('13~'16.2월)

연도	재결 건수	인용 (인용율)			기각	각하	취하	평균 재결기간 (단위:일)
		소 계	전부인용	일부인용				
2016.2월	147	29(18%)	8(5%)	21(14%)	79(54%)	39(27%)	18	101
2015	1,363	304(22%)	96(7%)	208(15%)	693(51%)	366(27%)	92	98
2014	1,115	256(23%)	83(7%)	173(16%)	559(59%)	200(18%)	78	79
2013	1,033	226(22%)	65(6%)	161(16%)	694(67%)	113(11%)	107	82

- ▶ 평균 재결기간 : '15년 98일('14년 평균 79일, '13년 평균 82일)
- ▶ 직원 1인당 사건처리 현황 : '15년 190건('14년 144건, '13년 131건)
- ▶ 위원회 1회당 평균 처리건수 : '15년 57건('14년 46건, '13년 43건)

《 행정심판 청구 증가 원인 》

- ① 시민 권리의식 향상으로 구청 처분 불복사례 증가
 - 정보공개관련 행정심판 : '14년 115건 ⇒ '15년 257건(142건 증가)
- ② 자치구의 변상금·이행강제금 등 적극조사 및 부과 실시(세원확보)
 - 이행강제금 행정심판 : '14년 72건 ⇒ '15년 147건(75건 증가)
 - 변상금관련 행정심판 : '14년 24건 ⇒ '15년 46건(22건 증가)
- ③ 경기불황으로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관련 생계형 심판 증가
 - 일반음식점 행정심판 : '14년 302건 ⇒ '15년 395건(93건 증가)
 - 노래연습장 행정심판 : '14년 31건 ⇒ '15년 57건(26건 증가)

〈 보완 필요사항 〉

- 행정심판 청구사건 증가와 사건의 복잡·다양화로 현장조사 및 사실관계 판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이유로 재결기간이 지연되고 있어 (처리기간 : 79일('14년) ⇒ 98일('15년)), 재결기간 단축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 행정심판법상 재결기간은 60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훈시규정)

□ 개선/보완 계획

○ 행정심판팀(3팀) 신설 및 위원회 개최횟수 증가

- 행정심판3팀 신설로 처리 안건 증가 도모
 - ▶ 기존 2팀 9명 → 변경 3팀 13명 ('16. 2. 4.字)
- 위원회 현행 연24회에서 연30회로 증회 검토
 - ▶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행정심판위원 증원 후 검토('16. 7월 이후)

기 존('16. 2. 4.이전)
2팀 9명
- 1팀 : 팀장1, 직원 4
- 2팀 : 팀장1, 직원 3
위원회 연 24회 개최 (월2회)



개 선
3팀 13명
- 1팀 : 팀장1, 직원 4
- 2팀 : 팀장1, 직원 3
- 3팀 : 팀장1, 직원 3
위원회 연 30회 개최 연 6회 추가 개최
※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위원 증원 후 검토('16. 7월 이후)

○ 유사·반복적인 민생사건은 처리절차 및 서식 간소화

- 유사한 내용으로 빈번하게 청구되는 식품위생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등 민생관련 사건은 처리서식 간소화로 위원회 1회당 처리안건 확대 및 재결기간 단축 도모
 - ※ 위원회 1회당 민생사건 처리현황 ('15년 23건 ⇒ '16.2월 47건)
- 정형화된 집행정지 신청사건은 처리서식 단순화하여 일괄처리

□ 향후계획

- 재결기간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행정심판 운영 개선계획 효과성 분석

5 서울시 마을변호사 확대 운영

마을변호사 사업 시행 동을 확대하고 변호사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시민 만족도 높은 우리시 대표적인 법률서비스 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 추진목표

- 서울시 모든 동에 마을변호사를 연결하여, 시민이 마을에서 편리하게 비용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
- 마을변호사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

〈김진철 의원 개선요구 사항('15. 11. 19)〉

- ▶ 마을변호사의 사적 사건수임 등 불합리 대비책 마련

□ 사업개요

- 현 황 : 183개동 / 366명('16.2월 현재)
- 상담 실적('14.12. ~ '16.1.)

(단위 : 건)

구 분	계	방문상담	전화상담
계	4,273	2,572	1,701
월평균	305	184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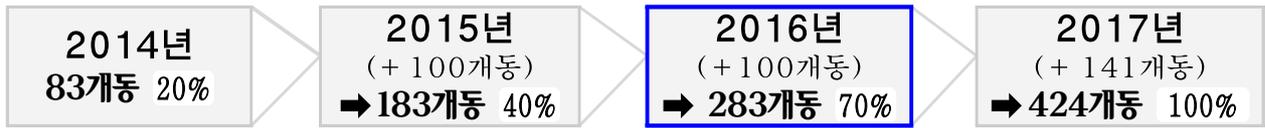
○ 사업평가(만족도 조사)

- 대 상 : 상담자 중 희망자 설문(응답자 351명) ※ 조사기간 : '15.11~12월
- 만족도 : 91.9점 ※ 마을변호사 재이용 의사 : 91.7%
- 기타 의견
 - ▶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상담할 수 있어 좋았음.
 - ▶ 마을변호사가 없는 곳(동)에도 시행이 되었으면 함

- 소요예산 : 총 306,640천원 ※ 예산사업명 : 마을변호사 운영

□ 마을변호사 시행동 확대

○ 마을변호사 연차적 확대 계획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주요 프로그램에 ‘마을변호사’사업 포함
- 찾아가는 복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

○ 2016년 마을변호사 100개동 확대

- ‘자치구의 수요조사’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확대
- 확대 시행일 : '16. 7. 1.

《 마을변호사 수임 관리 》

- 제한적으로 수임 허용 : ‘서울시 마을변호사 실무협의회’ 협의 사항
 - 가이드라인 준수 : 상담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사건 수임 허용
 - 법률구조공단 등 타 법률구조 방법을 먼저 안내
 - 민원인이 먼저 수임을 요청한 경우
 - 서울시와 무관한 개인 자격의 수임을 고지
 -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는 수임료
 - 수임 계약한 즉시 서울시에 수임 사실 통보
- 수임 내역('14. 12. ~ '16. 1.)
 - 총 9건, 각 계약 금액은 착수금 기준 30만원~300만원 수준

□ 개선/보완 계획

○ 마을변호사 사기 진작을 통한 만족도 높은 법률서비스 유도

- 마을변호사 워크숍 개최('16.5월), 표창 수여, 상담 미담사례 발굴·언론 홍보 등으로 마을변호사 스스로 더 나은 서비스 제공 유도

○ 상담 실적 확대 방안

- 시·구 가용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생활현장 홍보로 사업 인지도 향상
- 전산에 의한 실적 관리와 공유로 시·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수임 가이드라인 이행 철저

- 마을변호사에게 가이드라인을 정기적으로 안내 및 수임내역 공지

3. 건전재정 실현과 시민참여 확대

① 서울형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② 예산성과금 지급제도 정비·개선

③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

④ 시 및 투자·출연기관 부채·채무 감축 추진

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비보조금 관리개선

⑥ 투자·출자·출연기관 협력 및 소통 강화

⑦ 투자·출연기관 컨설팅 추진 및 사후관리 강화

⑧ 노사정 서울협약 이행을 통한 일자리창출 실현

1 서울형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참여예산제도의 그간 제도운영 경험과 성과를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서울형 재정협치 모델』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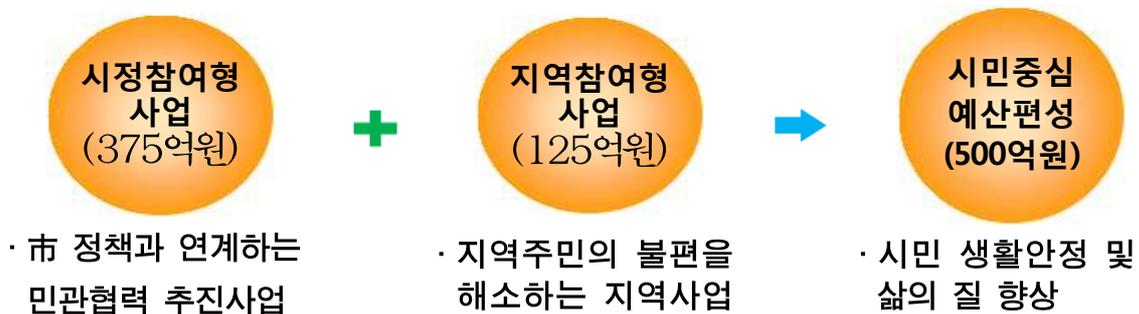
□ 추진목표 및 방향

-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주민참여 부족 등 질적인 수준이 미흡
⇒ 제도운영을 원점에서 재설계하여 **시민 주도성 강화방안** 필요
- 자치구의 현안사업 지원 형태 운영으로 자치구 과다경쟁 유발
⇒ 시정책심 사업과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중심 지원**이 필요
- 일반시민은 예산산출, 행정능력 부족 등으로 사업제안에 어려움
⇒ 우수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주민역량 강화** 필요

〈최호정 의원 개선요구 사항('15. 11. 19)〉

-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명칭 변경이 필요
- '주민참여예산·예산낭비신고센터'를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로 변경 완료('16.1.29)

□ 사업개요



-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시민의식과 자긍심 고취

□ 실태분석

- 그간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주민주도성 부족 등 질적인 수준은 미흡
 - 참여건수 매년증가('14년 1,533건 → '15년 3,593건, 2.34배↑)
 - 시민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보다 자치구 요청사업 위주로 진행됨
- 선정사업 대부분이 하드웨어적인 자치구 소관업무로 과다경쟁 유발
 - '16년 참여예산사업 498억원 중 402억원 약 80% 자치구 사무
 - CCTV 설치, 하수관거 개량, 공원 유지보수 등 개발사업 위주
- 시민의 필요사업이 예산산출, 행정지원 미흡 등으로 제안·선정 어려움

□ 개선/보완 계획

- 시정참여형 사업(375억원) : 市 정책영역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사업
 - 시정 20개 중점과제 중심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의제 선정 추진
 - 시민과 市 중간지원조직, 사업부서가 협력하여 사업발굴, 제안
 - 제안자 설명, 제안자그룹(시민), 예산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기준강화
 - ※ 지방자치법 제10조(사무배분) 등 법령에 따른 시 고유사무가 대상(자치구사업 제외)
- 지역참여형 사업(125억원) :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
 -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자치구간 횡단전개 가능 사업
 - 지역 SOC사업이 아닌 지역경제, 공동시설개선사업 등 지역문제 해결 사업
 - 자치구별 균등한 예산배분을 지양하고, 다수의 주민이 참여사업 지원
- 시민참여 역량강화 : 다수 시민이 참여 관심유도, 활동지원
 - 예산학교 심화과정 운영 및 인원확대(1,100명('15년) → 4,000명('16년))
 - 市 : 참여예산 위원, 시민, 학생 등(2,000명)
 - 자치구 : 지역위원, 지역활동가 등(2,000명)
 - 코디네이터단 지원 ⇨ 시민이 제출한 제안서 보완, 예산산출 등 행정지원

- 시민참여 활동강화 : 사업제안, 집행과정에 참여확대, 자긍심 고취
 - 모니터링, 사업평가, 현장확인 등에 참여하여 제안 취지에 맞도록 사업추진
 - 사업제안 시민 자긍심 고취 및 참여 확대유도 : 동관 등 설치, 안내문 게시
 - 주민참여 예산홈페이지에 『우리 동네사업』, 『자료실』 을 통해 활동지원
 -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주요 검색사이트에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명칭 변경

《참여예산 지원체계 강화》

- 분과위원회 세분화하여 기능강화
 - 기존 8개 ⇒ 10개 분과 확대(청소년, 디지털혁신)
- 시민참여 강화로 사업평가(모니터링 등) 내실화 추진 : 연 2회
- 사업제안서를 市 행정포털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사업부서 책임성 부여

□ 추진일정

시기(월)	추진내용
2월	▶ '16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3월	▶ 예산학교 운영 및 제안사업 공모 : 3.21~4.30.
4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
5월	▶ 사업 검토 및 심사(정기) : 5월~7월
6월	▶ '16년 추진사업 상반기 모니터링
8월	▶ '16년 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개최(최종결정)
9월	▶ '17년 참여예산사업 편성
10월	▶ '16년 추진사업 하반기 모니터링
12월	▶ 우수사업 발표 및 평가보고회 개최(평가결과 환류)

2 예산성과금 지급제도 정비·개선

예산 절감제안·낭비신고를 확대하여 예산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급심사의 공정성·객관성 강화로 예산성과금제 활성화에 기여

□ 추진방향

- 성과금 지급의 형평성 개선을 위해 시민 심사는 완화하고, 공무원은 엄격히 심사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을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참여 활성화

〈김진철·박양숙 의원 개선요구 사항('15. 11. 19, 11. 30)〉

- ▶ 시민예산성과금 지급 활성화, 예산절감에 대한 계량적 평가 필요
- ▶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인 공무원과 시민에 대한 지급기준 개선 및 홍보 강화 등

□ 사업개요

- 소요예산 : 248백만원(시민 50, 공무원 198) ※ 예산사업명 : 예산절약성과금
- 지급대상
 -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제출한 시민
 - 개인적·집단적 노력으로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한 공무원·조직(팀, 부서)
- 지급절차

시민·공무원	⇒	사업부서	⇒	재정관리·예산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낭비신고 및 제안(시민) ◦ 예산성과금 지급신청(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부서 의견조회(시민) ◦ 실국 자체심사위원회(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통한 지급대상 및 금액 결정

□ 실태분석

- 신청 및 성과금지급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지급(신청)	금액	지급(신청)	금액	지급(신청)	금액
시 민	71(445)	7,900	19(155)	7,500	12(132)	5,432
공무원	50(155)	274,000	45(127)	293,770	30(102)	174,000

〈 보완 필요사항 〉

- 예산절감 제안 및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를 통한 시민참여 확대, 성과금 심사기준 개선

□ 개선/보완계획

① 예산성과금제의 시민참여 활성화

- 시민신고 대부분이 민원성, 아이디어 수준에 그쳐 정책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바,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시민 제안·공무원 실행 성과금」 도입
 - “시민이 제안한 내용을 공무원이 실행하여 절감한 경우” 제안시민과 실행 공무원 모두 성과금 지급
- 시민 지급대상은 확대하고 심사기준은 완화, 사례금은 분기별로 지급
 - 보조금 부정수급, 전시성 행사·축제, 낭비성 사업 사전신고 등 지급대상 확대
 - 연 1회 성과금·사례금 지급에서 사례금은 분기별로 심사하여 신속 지급

②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개선

- 시민 누구나 친근감을 갖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신고” 위주에서 “제안” 중심으로 전환 ※ 낭비신고 108건 > 절감제안 24건('15년)
 - 예산절감제안 중심의 예산낭비신고센터 명칭·홈페이지 개선
-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효과적인 홍보
 - SNS,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와 시민참여행사(정책박람회 등)를 통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홍보 강화

③ 공무원성과금 심사기준 강화

- 공무원 직무범위내 업무에 대해선 보다 더 엄격한 평가기준 적용
 - 유형별, 등급별 심사기준을 세부 매뉴얼화 하고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여 타당하고 객관성 있는 결과 확보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구성시 시민이 참여하여 공정성 강화
 - 내부위원, 시의원, 재정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나 시민·시민단체를 포함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한 심사
 - ▶ 개선 : 내부위원(3), 시의원(2), 재정전문가(4), 시민·시민단체(2)

3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

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시행함으로써 투자사업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추진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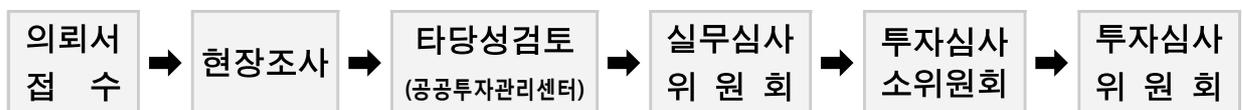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강화를 통한 전문성·독립성 제고
- 사업부서와 공공투자관리센터 간 B/C 분석 편차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김종욱·박양숙 의원 개선요구 사항('15. 11. 19)〉

-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 사업부서와 센터 B/C 분석이 상이하며, 사업부서에서 B/C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음
- ▶ 공공투자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등 필요

□ 투자심사 개요

- 대 상 :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등
-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시급성·재원조달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분석
- 심사방법 :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15명 이내 심의(외부 12, 내부 3)
- 심사절차



- 심사결과
 -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으로 결정
 - 총 사업비 200억 이상 사업(국비 포함) 등은 중앙심사 의뢰
- 소요예산 : 총 103백만원 ※ 예산사업명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 실태분석

○ 추진실적

- '15년 투자심사 결과 : 총 7회(정기 4·수시 3) 실시

(단위 : 건, 억원)

계		적 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		반려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181	55,018	109	35,403	43	11,986	21	4,805	-	-	8	2,824

※ '14년 총 5회 127건 심사(적정 56, 조건부추진 36, 재검토 23, 반려 12)

〈 보완 필요사항 〉

○ 사업부서와 공공투자관리센터 간 B/C 분석 결과 편차 완화

- 투자심사 대상사업 B/C 평균('12~'15년) ⇒ 사업부서 2.53 vs. 센터 0.87

○ 타당성조사 등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강화 필요

- 지방재정법 개정 및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으로 인한 센터의 타당성조사 직접 수행 불가로 기능 약화 우려

□ 개선/보완 계획

① 투자심사 단계별 개선사항 (6단계)

○ 1단계 ⇒ 의뢰서 제출 (사업부서 ▶ 재정관리담당관)

- 투자심사 경제성분석(B/C) 사례 중심의 가이드라인 제정(11개 분야)

- 투자심사 경제성 분석 교육 실시(상·하반기 2회)

○ 2단계 ⇒ 현장조사 (현지심사)

- 공공투자관리센터 유관분야 외부전문가 합동 현장조사 시행

- 사전절차 이행사항 및 주변동향 등 종합적 검토

○ 3단계 ⇒ 타당성검토 (공공투자관리센터)

- 외부전문기관 타당성조사 용역착수 전 공공투자관리센터와 협업 활성화

- 타당성검토 '2단계 분석' 제도 도입(최초 의뢰서(1단계)+수정·보완 의뢰서(2단계))

- 4단계 ⇒ 실무심사위원회 (안건 상정여부 결정)
 - 타당성 미흡사업 통과 사전 배제 시스템 구축
 - ▶ '사업계획 적정성 분석' 도입 ⇒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 위원회 상정 前 반려
- 5단계 ⇒ 투자심사 소위원회 (13개 분야를 2개 분과로 구분 운영)
 - 투자심사위원회 현장심사 도입
 - ▶ 소위원회 시 쟁점사업에 대해 투자심사 외부위원 1/3 이상 현장 직접 방문
- 6단계 ⇒ 투자심사위원회 (최종심사)
 -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의견 반영 강화
 - ▶ 송부시기 조정 및 수정내용 심사 적용
 - (종전) 소위원회 당일 ⇒ (변경) 실무심사위원회 개최 전 송부
 - 투자심사의뢰서의 수정·보완된 내용으로 심사초기부터 진행되도록 개선
 - ▶ 투자심사위원회 시 센터 검토의견 제시 범위 확대 (총사업비·사업규모 등)

2 기타부문 개선사항

- 타당성조사 ⇒ 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강화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대규모 사업 타당성조사 전담
 - ▶ 출연금에 의한 센터 직접 수행방식 도입 ※ 출연금 : 5억('16년)
 - ▶ 외부전문기관 용역사업은 센터 검증 의무화(간접수행)
- 타당성검증 ⇒ 운영 체계화
 - 타당성검증 대상 구체화(지침 명문화) 및 확대(자치구·투자·출자/출연기관)
 - 타당성검증 시기 명확화(용역완료 2~3월 前) 및 결과 반영 의무화(서식추가)
- 중앙투자심사 ⇒ 체계적인 대응
 - 사업단계별(4단계) 체계적 대응
 - ▶ ① 사업계획 ② 市투자심사 ③ 중앙투자심사 의뢰 전 ④ 중앙투자심사 의뢰 후
- 유관기관 간 상생협력 강화 ⇒ 상호교류 확대
 - 공공투자관리센터 개소 4주년 세미나 개최('16. 11월)
 - ▶ 행정자치부, PIMAC·LIMAC, 타 지자체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참여
 - 공공투자관리센터와 사업부서 간 협력 워크숍 실시('16. 12월)

4 시 및 투자·출연기관 부채·채무 감축 추진

서민복지 시민안전 등 민생지원 사업에 적극 투자하면서도 '18년까지 채무 10조원·부채 1조원 감축을 통해 市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 통합재정관리를 통한 채무 10조원·부채 1조원 감축 (~'18년)

채무 19조 9,876억원 ⇨ 9조 9,306억원 (△10조 567억원)
 부채 26조 8,812억원 ⇨ 25조 6,828억원 (△ 1조 1,984억원)
취입시(민선5기) '18년까지

○ 관리지표 : 엄격한 기준 설정·운용 ※ 공기업 부채비율 적정화 집중 모니터링

- ▶ 시 : 예산대비 채무비율 15%이내 수준 유지
- ▶ 투자기관 : 투자기관 평균 부채비율 150% 이하 유지

※ 행자부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 : 예산대비 채무비율 25%이상(주의), 40%이상(심각)

※ 행자부 투자기관 부채비율 목표 : ('15년) 280% → ('16년) 240% → ('17년이후) 200%

※ 연도별 채무·부채 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11. 10.(A)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B)	증감(B-A)
총계	199,873	127,490	122,786	140,232	99,306	△100,567
서울시	32,554	32,409	34,228	35,730	39,004	6,450
투자기관	167,319	94,939	88,558	104,502	60,302	△107,017
출연기관	-	142	-	-	-	-
구분	2011(A)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B)	증감(B-A)
총계	268,812	278,505	286,379	278,869	256,828	△11,984
서울시	45,093	58,442	60,079	64,264	71,347	26,254
투자기관	220,109	215,993	222,148	210,502	181,353	△38,756
출연기관	3,610	4,070	4,152	4,103	4,128	518

□ 추진상황 상시관리 시스템 구축

○ 채무감축 추진상황 상시 관리

- 채무현황, 변동내역, 원인분석 및 대책, SH공사 택지매각 및 주택분양 수입금 회수상황 관리 등 채무관리 실적제출(매주)
- 채무관리 실적을 토대로 채무 및 부채 감축 분석 협의회 개최(월1회)

○ 기관별 추진상황 관리(분기) 및 자체 T/F 등 점검체계 운영

- 시 및 투자기관 채무·부채 감축 계획·추진상황 보고회 개최('16. 3, 9, 12월)
- ※ 투자출연기관장 회의(공기업담당관 주재)와 연계하여 실시

【참 고】 - 주요 기관별 현황

서울시 - 서민복지 및 시민안전 사업비 증가, 부채·채무 증가 최소화

채무 3조 2,554억원('11년) ⇒ 3조 9,004억원('18년) (6,450억원↑)

■ 신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증가(6,450억원)

- 감채기금 가용재원 활용하여 시 채무 중 중도상환 가능한 채무(99억원, 금융기관 차입금) 중도상환 및 상환계획에 의한 차질 없는 상환(1조원)에도 불구하고,
- 사업비 조달을 위한 신규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른 채무증가 전망
 - 임대주택 공급사업 관련 주택기금 차입(4,982억원), 풍납토성 복원사업(1,710억원) 등

부채 4조 5,093억원('11년) ⇒ 7조 1,347억원('18년) (2조 6,254억원↑)

■ 임대주택 공급 증가 추진계획에 따른 부채증가 전망

- 임대주택 14만호 공급(민선5기 8만, 민선6기 6만) : 2조 2,306억원

■ 미지급금 추가산정에 따른 부채증가

- 교육비특별회계 미지급금(1,819억원) 및 시내버스 재정지원금(3,661억원) 등

투자기관 - 비용절감 및 수익증대 등 자구노력 통한 채무·부채 감축 추진

채무 16조 7,319억원('11년) ⇒ 6조 302억원('18년) (10조 7,017억↓)

■ (SH공사) 고덕·강일, 향동 등 대규모 신규추진 사업이 대부분 '17년 완공에 따른 주택·택지 매각 등 흑자 전환 등

- '15년(△5,077억), '16년(11,401억), '17년(△19,880억), '18년(△23,703억)

■ (양공사) 시정 컨설팅 결과 개선과제 추진 등 비용절감·수익창출

부채 22조 109억원('11년) ⇒ 18조 1,353억('18년) (3조 8,756억↓)

■ (SH공사) 신규사업 및 지연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통한 선수금 감축

- '15년(△1,920억), '16년(△9,740억), '17년(△1,213억), '18년(△9,175억)

■ (SH공사) 임대주택 공급사업 추진에 따른 임대보증금(부채) 증가

- 임대보증금 증가액('15~'18) : 1조 4,221억 원

출연기관 - 퇴직급여충당금 등 자연증가에 따른 부채 증가

부채 3,610억원('11년) ⇒ 4,128억원('18년) (518억↑)

5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비보조금 관리 개선

시비 보조금 운영 전 과정에 대한 혁신적 개선을 통해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적정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 사업개요

- 시비보조금 예산 : 7조 123억원(1,193개 사업)

(단위 : 억원)

구분	계	공공단체 보조					민간 보조															
		소계	자단경	치체상	교육관	치체자	예비군성	소계	민경보	간상조	민단법	간체정	민행보	간사조	운업보	수계조	사복보	회지조	사복법	회지정	민자보	간본조
사업수	1,193	836	426	14	395	1	357	183	10	27	4	66	18	49								
예산	70,123	56,481	50,191	1,885	4,402	3	13,642	2,271	208	80	5,386	2,812	1,297	1,588								

○ 중점 추진사항

- 보조금 성과평가 강화, 보조금 관리시스템 개선, 보조금심의위원회 내실화
 - ※ 연도별 보조금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43,690	51,243	59,974	67,699	70,123
공공단체보조	31,220	38,176	45,965	53,905	56,481
민간보조	12,470	13,067	14,009	13,794	13,642

□ 실태분석

○ 보조금심의위원회 보조사업 심의기능 강화 필요

- '15년 심의대상 1,148개 사업 원안가결(일부 사업변경 등 권고사항 69건)

○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대상 확대 필요

- 지방재정법 개정('14.5)으로 평가가 강화되었으나 '15년 실적은 전체 사업비의 0.4%(30개사업 245억원)

○ 일부 민간보조사업자의 회계관리 역량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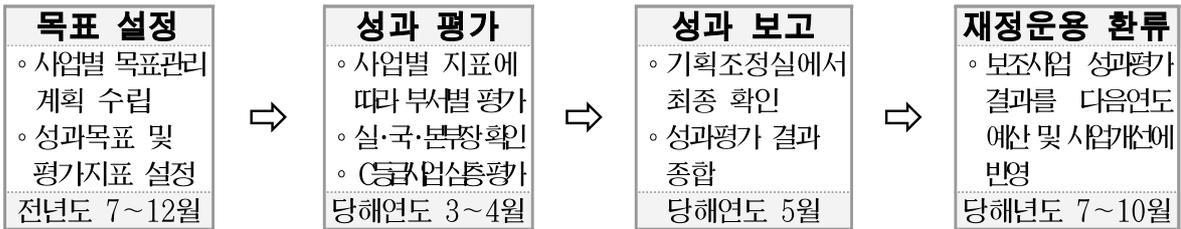
- 민간보조단체의 영세성 → 보조금 관리 역량 및 인력 부족

○ 다수 개별 보조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점검 및 정산에 한계

□ 개선/보완 계획

예산 편성 - 보조사업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성과평가 하위 10% 대상 심층평가 및 다음연도 예산편성 반영



※ 실·본부·국별로 전체 대상사업에 대하여 A등급(10%), B등급(80%), C등급(10%)으로 구분

- 평가대상 : 중점관리 보조사업(868개 사업, 1조 3,846원)
- 실·본부·국별로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C등급 사업을 중심으로 심층평가 실시
- 심층평가 결과 '미흡' 사업은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사업 축소·중단 조치

보조금 집행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보조금 전용카드 이용실적 의무화 비율 단계적 확대('15년 8.4% 수준)
 - 소규모 민간보조사업자 집중 관리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확대('15년 29% 수준)
- 보조금 관리 내역 공시 강화
 - 보조금 총괄 현황 → 부정수급, 의무위반 등의 사례 공시 등 공시 내용 구체화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적정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 보조금관리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추진
 - 보조사업자 통장거래 실시간 모니터링, e-호조 시스템과 연계 등 개선 추진
- 보조금 관리교육 강화를 통한 운영능력 배양
 -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집합교육, 동영상), 보조금 업무교육(인재개발원)
- 보조금 관리 및 보조사업 성과관리 매뉴얼 작성·보급
 - 유형별 우수 사례 및 부적정 사례 공유

6

투자·출자·출연기관 협력 및 소통 강화

19개 투자, 출자·출연기관과의 협력 및 소통시스템을 구축·실행하여 경영의 자율성과 공공성 및 효율성 확보를 지원

□ 추진방향

- 기관 주요 현안에 대한 소통체계 강화를 통한 경영개선 지원
- 시 - 기관 간 현안사항 및 주요업무 공유를 통한 상시 협조체계 유지

〈권미경·이숙자 의원 개선요구 사항('15. 11. 19, 11. 30)〉

- ▶ 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을 들어 지침과 현실과의 괴리감 해소
-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사전 설명 및 보고 미흡

□ 시 - 기관간 협력강화 방안

- 기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사전협의 과정 이행
 - 대 상 : 예산편성기준, 경영평가 지표, 공사채 발행 제도 운영 등
 - 방 법 : 시와 기관 간 사전 소통을 통해 의견수렴 및 반영으로 경영의 효율성 강화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 심의·의결 기능 외에 필요시 주요 현안 의견수렴 및 자문
 - 정례회의 개최로 예측가능성 보완 :
[현행] 안건 발생시 → [개선] 격월 개최 원칙
 - ※ 운영심의위원회 현황
 - 구 성 : 위원 13명(당연직 3, 위촉직 10(시의회 추천3, 위원장 추천7))
 - 주요기능 : 기관 설립·운영 타당성, 기관장 성과평가, 경영실적 평가 등
- 주요 현안에 대한 소통협력시스템 구축 운영
 - 투자, 출자·출연기관장 회의 운영(시장 또는 1·2부시장 주재, 실무회의 등)
 - 기관장 회의 시, 주관부서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업무 협조체계 마련
- 시에서 참여하는 당연직 이사제도 정비를 통하여 실질적인 운영 지원
 - 기관 규모 및 기능에 따른 당연직 이사 정비(직위 조정 등)로 실질적 참여

7

투자·출연기관 컨설팅 추진 및 사후관리 강화

투자, 출자·출연기관 컨설팅 추진 시 내부 TF를 구성·운영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 철저한 사후관리로 시정성과 제고

□ 컨설팅 추진현황

〈맹진영·오경환 의원 개선요구 사항('15. 11. 19, 11. 30)〉

- ▶ 1·2단계 컨설팅 혁신과제별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필요
- ▶ 3단계 출자·출연기관 주요사업 컨설팅 내부 TF팀 구성 검토

○ 1단계 컨설팅 : 완료('13. 3월 ~ '14. 2월)

- 대상기관 : SH공사, 지하철 양공사, 시설관리공단, 서울연구원
- 수행기관 : 맥킨지·삼일회계법인 컨소시엄
- 추진내용 : 73건 과제 추진,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관리

기관명	과제	'15. 4분기 평가결과	재정효과
계	73	완료 26, 정상추진 41, 기타 6	3,593억원
서울메트로	15	전동차 입찰경쟁 원가절감, 광고주 다각화	781억원
도시철도공사	16	광고주 다각화, 신규브랜드 점포 유치 등	462억원
S H 공사	29	분양수익 증대, 대체재 활용 등	2,350억원
시설관리공단	3	마케팅 전문가 채용, 인력효율화 추진	-
서울연구원	10	성과관리체계 개선, 서울시외 수탁고객 비중 확대 등	-

○ 2단계 컨설팅 : 추진 중('15. 6월 ~ '16. 3월)

- 대상기관 : 신용보증재단, 관광마케팅, SBA, 농수산물공사,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
- 수행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엘리오앤컴퍼니 컨소시엄
- 추진내용 : 87개 실행과제 도출, 기관별 최종 실행계획 보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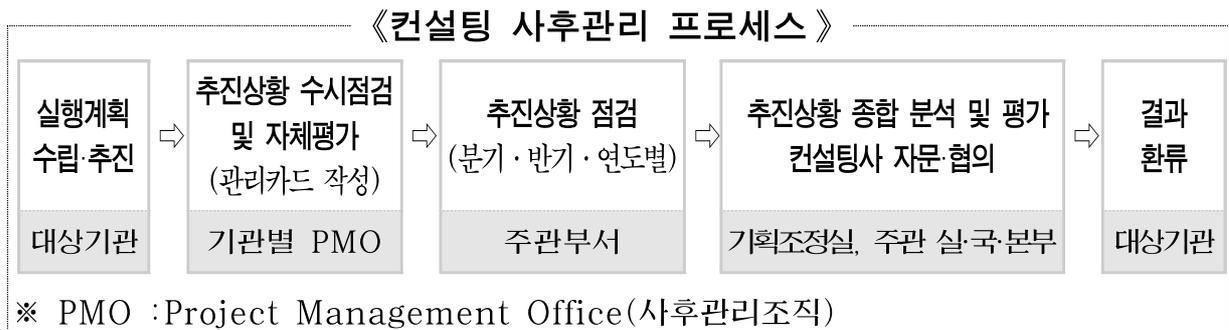
기관명	과제	주요내용
서울의료원	14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유치, 의료품질 제고 등 공공의료 강화
서울산업진흥원	15	창업지원, 판로지원, 산업클러스터 고도화 등 일자리창출 선도
서울신용보증재단	15	중금리보증상품 개발, 소상공인 금융·컨설팅 종합지원 등
관광마케팅(주)	15	설립형태 전환, MICE 유치역량 강화, 마케팅 전략 차별화 등
세종문화회관	13	자체공연 제작역량 강화, 시설경쟁력 회복 등
농수산물공사	15	시장관리체계 선진화, 유통안정성 강화, 관광명소화 추진 등

- 3단계 컨설팅 : 계획 수립 중('16. 3. ~ 10월)
 - 목 적 : 기관역할 재정립, 재무구조 건전화 등 혁신방안 마련
 - 대상기관(안) : 여성가족재단, 문화재단, 디자인재단
 - ※ 복지재단(컨설팅중, '16.3월준공), 시립교향악단('15년 시행) 제외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 850백만원
 - 추진방법 : 컨설팅 추진TF 구성 및 운영

구 분	추진내용
구 성	총 30명 ※ 기관별 6명(주관부서1, 공기업담당관2, 기관3)
운 영 방 법	정기 실무협의 개최(월 2회) 및 자문회의 결과 반영
기 능	- 과업지시서 검토, 컨설팅 주요내용 및 핵심과제(안) 도출 지원 -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환류, 컨설팅 완료 후 평가 등

□ 컨설팅 사후관리체계 확립('16. 3월중)

- 자발적 경영혁신 실행계획 수립·추진을 통한 실행력·지속성 담보
- 시, 대상기관, 컨설팅사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실행 지원
- 분기별 실행계획 추진상황 평가 및 결과 환류



□ 추진일정

- 컨설팅 결과 사후관리 시스템(안) 마련 : '16. 3월
- 3단계 컨설팅 과제 TF 구성·운영 : '16. 3월
- 3단계 컨설팅 용역 추진 : '16. 3. ~ 10월

8 노사정 서울협약 이행을 통한 일자리창출 실현

청년 및 고령자의 지속적·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투자, 출자·출연기관 노사정 서울협약의 차질 없는 이행 철저

□ 협약 개요

〈권미경·박양숙 의원 개선요구 사항('15. 11. 19)〉

- ▶ 서울형 임금피크제가 단순히 임금삭감이 아니라 청년고용 등의 효과가 있도록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투자, 출자·출연기관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사정 서울협약 체결

- 체결일 : 2015. 12. 15.(화)
- 체결대상 : 시장, 19개 기관장, 13개 기관 노조위원장, 모델협의회 위원장 및 공익위원

○ 협약내용 : 6대 과제, 13개 세부실천과제

- ① 청년의무고용 확대 (2)
- ② 청년 및 고령자 창·취업 프로그램 마련 (6)
- ③ 임금피크제는 노사합의로 실시 (1)
 - ※ 1단계(2016.1.1.) 8개 기관完, 2단계(2017.1.1.) 11개 기관
- ④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안 마련 (1)
- ⑤ 직접고용 확대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 (2)
- ⑥ 투자, 출자·출연기관 공동 일자리 박람회 실시 (1)



〈노사정 서울협약 체결, '15.12.15.〉

□ 협약 성과목표

○ 성과목표 : 향후 5년간('16~'20) 신규 일자리 9,801개 창출

(단위 : 개)

구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9,801	2,520	1,995	1,760	1,743	1,783
신규사업 등 일자리 창출	5,191	1,510	1,025	906	848	902
임금피크 신규채용	891	490	272	70	52	7
정년퇴직 자연충원	3,719	520	698	784	843	874

□ 6대 과제 세부추진계획

- ① 청년 의무고용(정원의 3%이상) 준수 : 19개 기관 / 약 660명
 -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신규채용 및 퇴직자 충원 시 청년 우선 채용
- ② 청년 및 고령자 창·취업 프로그램 마련
 - 사내벤처 사업 육성(메트로), 지하도상가 공간제공(시설공단), 사회적기업 연계 접수리 사업(SH 공사), 창업 교육 및 일자리 매칭 전담 조직 신설(서울산업진흥원)
 - 퇴직자 재취업 프로그램 마련
- ③ 임금피크제 도입·시행 : 19개 기관 (8개 기관 완료, 11개 기관 도입예정)
 - 상시 고용 300인 이상('16. 1. 1. 시행중) : 8개 기관 / 891명(신규채용목표)
 - ※ 메트로, 도철, 시설, 농수산, SH 공사, 의료원, 서울신보, 세종문화회관 ⇨ 임금피크율(5~20%, 2~3년)
 - 상시 고용 300인 미만('17. 1. 1. 예정) : 11개 기관
 - ⇨ 임금피크 설계 및 내부 규정 정비 지원, 창·취업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 ④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 시범기관 선정(2개 기관) 및 용역 추진 : 2016. 3. ~ 8.
 - 노동시간단축 모델 정립 및 외부확산 : 2016. 하반기
- ⑤ 직접고용 확대 등 양질의 일자리 마련
 - 시민 안전 외주사업 내주화 : 승강장안전문 150명(메트로)
 -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화 : 청소, 시설경비 등 515명
- ⑥ 투자, 출자·출연기관 공동 채용박람회 개최 - 일자리노동국 협업시행
 - 채용설명회, 공기업 홍보, 모의면접 등
 - ※ 뉴딜 일자리 박람회 연계 실시 : 2.18.~ 2.19(2일)

□ 추진일정

- 기관별 서울협약 이행목표 확정 및 평가기준 마련 : '16. 2. ~ 4.
- 노사정 서울협약 이행실태 점검(분기/수시) : '16. 3. ~ 12.

《'서울협약' 이행점검단 구성·운영(1.19)》

- 구성 : 10명(노조 3, 사용자 3, 서울시 3, 모델협의회 1)
- 역할 : 서울협약 이행점검을 통해 협약의 실효성 확보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

4. 교류협력을 통한 서울의 위상 제고

① 타 지자체·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상생 실현

② 전략적 도시외교를 통한 글로벌 소통 강화

③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제도 확대 및 활성화

④ 서울형 우수정책 해외진출

⑤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1 타 지자체·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상생 실현

타 지역과 교류협력 확대 및 다양한 분야의 시민체감형 상생협력사업 발굴·확대를 통해 지역 간 상생발전의 토대 마련

□ 추진목표

- 지역에서 찾아오는 수동적 교류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상생교류로 전환
- 물적교류에 비해 미흡했던 지자체 간 인적교류 활성화 도모
- 행정 중심의 상시적 협력체계에서 민-관간의 협력체계로 확산

□ 추진계획

○ 찾아가는 적극적 상생교류로 전환

- 우호협력지역 정기 방문 및 지속적 교류 추진
 - ▶ 지역별 중요 축제·행사 연계, 우수정책 상호 홍보 추진으로 방문효과 제고
 - ▶ 폭설·폭우 및 가뭄 등 재해·재난 발생 시 지역 피해복구 및 인력·장비 지원
-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교류사업 추진
 - ▶ 영남, 강원지역 등 우선 방문으로 지역별 편차 해소
 - ▶ 지역 폐교·빈집·휴경지 등 유휴시설 활용·협력 사업에 지역안배

《 2015년 서울시 우호교류협약체결 현황 》

- 광역(3) :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 기초(15) : 정읍, 포천, 진안, 고창, 함평, 거창, 고령, 철원, 남해, 영월, 담양, 장흥, 강진, 영암, 진주

※ 민선5기 협약체결 현황 : 광역 3(충남,전북,강원), 기초 5(완주,수원,순천,금산,완도)

○ 인적교류를 통한 지역과의 연대 강화

- 서울시정 정책연수프로그램 운영 추진(타시도 → 市) ➡ '16.4월~
 - ▶ 市 우수정책 및 현장 발굴·매뉴얼화, 정책별 전담강사 지정으로 맞춤형 운영
 - ▶ 참여대상 및 투어현장 확대, 투어기간 다양화로 체험형 정책연수 프로그램 개발
- 市 기술인력 지원 및 타지자체 정책연수 추진(市 → 타시도)
 - ▶ 도시운영 기술 노하우 전수 공유 예) 충남 가뭄피해 누수탐지·복구기술(상수도, '16.1월)
 - ▶ 협약체결 지자체와 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 예) 강진 다산공직관 청렴교육 참여

○ 상생교류사업 집중홍보로 시민참여

- 지역과 상생하는 서울 이미지 제고
 - ▶ 우호교류협약체결 지자체 주요 축제·행사 홍보 및 서울시 후원 문구 노출
 - ▶ 지역 상생교류사업 수범사례 상생백서 제작 및 공유('16.10월)
- 공감과 참여확대를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강화
 - ▶ 지역상생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및 시민참여 지역상생 박람회(EXPO)('16.6월)

○ 지역상생교류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지역 상생교류사업 지원단」 운영 ➡ '16.4월 중

〈김현아·맹진영·최호정 의원 개선요구 사항('15. 11. 30)〉

- ▶ 지역 상생교류사업 사무 민간위탁 시 사업의 본래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 방법 및 기간, 공모형태 등의 검토 필요

- ▶ 역 할 : 지역 상생교류사업에 대한 민관협치 강화 및 컨설팅 기능 지원
- ▶ 방 식 : 경험·노하우를 가진 기관에 사무위탁 추진(전문가 확충 및 컨소시엄 방식)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 2018. 12. 31 (2년 8개월)
 - 공모형태 : 전국단위에서 지역 상생교류사업(분야)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필요 시 전문단체 간 컨소시엄 참여 가능
 - 심사기준 : 지역 상생교류사업(분야) 실무경험 및 네트워크 운영 등의 활동실적과 지역별 전문인력 구성에 대한 평가강화

2

전략적 도시외교를 통한 글로벌 소통 강화

지속가능 개발, 정책 공유 관련 핵심지역 중점교류 확대 및 국제 인적 네트워크 강화로 서울시 위상 강화

□ 추진방향

- 국제회의 참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 비전을 세계와 공유
- 유력인사 초청외교로 서울시 인적 네트워크 및 국제적 위상 강화
- 서울시 공공외교 강화를 통한 글로벌 도시로 도약

□ 추진실적

- 자매우호결연 체결 : 총 4개 도시 신규체결
 - 몬트리올(캐나다, '15.4.8), 츠와네(남아공, '15.4.10), 비엔티엔(라오스, '15.11.5), 런던(영국, '15.12.4)
- 전략적 해외순방 추진 : '15년 총 5회 해외순방 추진
 - 시민안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도쿄(홋카이도) 방문 : 2.1~6
 - 메르스로 침체된 서울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국(광저우·상하이 등) 방문 : 8.2~6
 - 동북아 리더도시로서 서울시 위상 제고를 위한 울란바토르 방문 : 9.20~23
 - 세계저명인사가 회원인 21세기 컨퍼런스 참가를 위한 중국 방문 : 11.1~5
 - 서울시의 기후환경 국제리더십 발휘를 위한 파리 방문 : 12.3~7
- 친서울 네트워크 확충 및 해외 국가·도시의 날 개최
 - ‘서울 명예시민’ 신규 위촉 : ‘15년 25명 신규 위촉
 - 주요도시에 ‘서울클럽’ 개설 : ‘15년 2개 도시 신규 개설
 - 해외문화를 서울시민에게 알리는 ‘해외 국가·도시의 날’ 개최(총5회)

□ 추진계획

① 아시아·미주 중점교류

- 방콕(자매결연 10주년), 하노이(자매결연 20주년) 등 결연계기와 연계해 서울의 문화, 서울시 우수정책 등을 아시아 주요도시에 전파 : 7월
 - 현지 한류콘서트, 전통공연 개최, 서울시 우수정책 공유 워크숍 개최 등
- 주요 국제회의 참가로 지속가능개발·사회적경제 비전 국제적 공유 : 9~10월
 - GSEF(9월/캐나다몬트리올), HABITATⅢ(10월/에콰도르 키토) 참가예정
 - ※ 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 :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 ※ HABITAT(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 해비타트
- 미주 주요도시 자매결연 기념계기 활용 문화교류 추진
 - 샌프란시스코 : 자매결연 40주년, LA : 우호결연 10주년

② 서울시 국제네트워크 강화 : 상시

- 유력인사 '서울 국제자문단' 위촉으로 국제경쟁력 확보(전임시장, 세계적 석학 등)
- 감동을 주는 초청외교로 국제 인적 네트워크 강화(주요 정부관계자)
- 소요예산 : 66백만원 ※ 예산사업명 : 외빈초청여비

③ 시민에게 자매우호도시 문화체험기회 제공

- 지구촌 나눔한마당('16.5.7~8)개최로 시민의 글로벌 문화 체험기회 확대
 - 지구촌 전통음식과 문화 체험, 사진·영상 등을 통해 나라별 특성을 제공
 - 다양한 주제의 기부와 후원·결연 행사를 개최해 나눔의 장 마련
- 해외국가·도시의 날 개최 : 5회
 - 주한대사관 신청 국가·도시와 '도시의 날' 개최(매년 3월 신청 → 4월 선정)
 - 프랑스의 날·캐나다의 날·중남미의 날(영화상영, 사진전시 등), 방콕 또는 하노이의날(전통공연 등), 중국의 날(전통공연 등)
- 소요예산 : 605백만원 ※ 예산사업명 : 지구촌한마당 495백만원, 행사운영비 110백만원

3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제도 확대 및 활성화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을 확대하고 명예시민이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발굴·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명예시민 활성화 추진

□ 추진방향

- 시정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에 대한 서울시 명예시민 선정 확대
- 시정자문단, 홍보대사 등 시정 참여 확대 및 명예시민 인센티브 강화

〈김종욱·김현아·신건택·오경환·이숙자 의원 개선요구 사항('15. 11. 19)〉

- ▶ 명예시민 대상자에게 구체적 역할부여 및 활용방안 마련 필요, 실질적인 혜택 추가 제공 필요

□ 사업개요

- 선정기준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2항
 - 서울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 또는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자
 - 서울시 방문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선정절차



- 명예시민 현황 : 누적 92개국 740명 위촉
- 소요예산 : 40백만원 ※ 예산사업명 : 서울시 외국인명예시민 선정

〈 보완 필요사항 〉

- 자격요건을 완화해 시정에 기여한 외국인에게 수여 가능성 확보 필요
- 명예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 시정 기여도 향상 요구
- 명예시민에게 제공하는 혜택 확대 필요

□ 개선/보완 계획

	명예시민 설문 조사 (15.10.28. 실시)	브레인 스토밍
주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시민과의 소통 강화 • 해당국가와의 교류 활성화 • 이민 심사, 공항입출국 편의 • 관광명소 입장무료 • 대중교통 무료사용 • 시정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인권 분야 등의 사업부서에서 내부 추천을 받아 선정 • 명예시민 대상, 시정 홍보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시장순방 자문회의 때 지역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방안
자격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안」 마련 ▶ 거주조건 완화로 시정 기여 외국인에 대한 명예시민 수여 확대 	
공신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시민의 추천 조건 강화(10인 이상 시민 연서 → 30인 이상) ▶ 명예시민 정기 심사 확대(연 1회 → 연 2회) 통한 관리 강화 	
시정참여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정 참여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정례화(연2회) ▶ 전문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자문단으로 참여기회 부여 	
시정 홍보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등 시정 관련 주요 정보를 명예시민 전용 메일로 제공 ▶ 명예시민이 시정 '홍보대사'로서 역할 수행의 기반 마련 	
실질적 혜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혜택(시립미술관·박물관 무료 입장 등) 관련 안내 ▶ 민간시설(N타워, 놀이공원 등) 이용 시 추가 혜택 부여 방안 검토 	

□ 기대효과

- 시정 참여 적합 분야에 자문관 위촉으로 명예시민 역할에 대한 자긍심 제고
- 서울시 홍보대사에 명예시민을 위촉하여 다양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 민간시설 이용 시 실질적 혜택지원으로 명예시민으로서의 만족도 상승

4 서울형 우수정책 해외진출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유관기관, 민간기업과의 전방위적 협력을 통해 정책공유·전파 및 서울형 정책모델의 해외진출 사업 실행력 강화

□ 추진목표

- 도시간 교류 협력, 정책컨설팅을 기반으로 후속사업 발굴 및 본사업 수주
 - 신규 추진 14건 (본사업 수주 5, 본사업 발굴 2, 신규사업 발굴 7)
- 국내·외 유관기관 자원, 플랫폼을 활용해 서울시 정책전파 및 수요 발굴

〈맹진영·최호정 의원 개선요구 사항('15. 11. 19, 11. 30)〉

- ▶ 우수정책 해외수출 시 수수료 등 수익창출 노력 필요
- ▶ 우수정책 해외수출 전담조직의 업무추진 부분이 안정적 조직으로 갈수 있도록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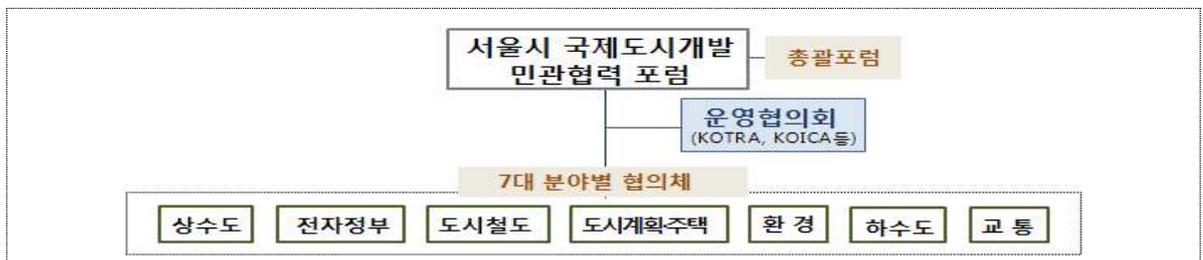
□ 사업개요

- 서울의 성공적인 도시발전 정책과 경험을 해외도시에 공유·전수
 - 해외도시협력담당관(G2G 총괄)과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G2B 전담)의 서울시 정책 수출사업의 총괄·지원 역할 수행
- 타깃도시 맞춤형 정책상품(서울정책패키지) 개발 및 홍보채널 다양화
 - 서울정책 아카이브 제공언어 확대(2→5개), 뉴스레터 발송, 언론홍보 강화
- 타깃지역 현지 정책워크숍 개최(중남미, 동유럽, 아시아)
- 유관기관·민간기업과의 협력으로 서울형 정책모델 사업개발 및 수주 지원 (KOICA, KOTRA, 기재부 등 플랫폼 및 재원을 활용하여 민간기업과 사업실행)
- 소요예산 : 총 2,670백만원
 -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교류 활성화(1,145백만원),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1,102백만원), 세계도시 정책공유 플랫폼(423백만원)

□ **추진실적('15년)** : 4개 분야 8개국 11개 사업(정책컨설팅 7, 본사업 4)

□ **추진계획**

-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을 통한 사업 실행력 강화로 사업수주·수익창출
 - 서울시 우수정책을 해외도시에 제안 가능한 사업모델로 개발
 - 도시정책 수출사업의 기업 협력 가이드라인 마련(협력기업 선정절차, 수수료 기준 등)
 - 정책수출사업단과 민간기업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수주를 통해 수익창출
- 「서울시 국제도시개발 민관협력 포럼」의 정례적 운영을 통해 기업,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 총괄포럼(4,6,9,12월), 운영협의회(2,5,7,10월), 분야별 협의체(수시) 개최
- 협력기업 추천 대상 초청연수 우선 실시(인재원, 시립대 연계)
- 「세계도시 정책공유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 「도시정책공유 국제포럼」 개최(6월, 서울시·UN ESCAP·CITYNET 공동 주관)
 - ※ UN ESCAP(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 ▶ 참가자 : 300명(해외 100명, 국내 200명)
 - ▶ 주요행사 : 전체회의, 분야별 회의, 현장견학, 홍보·전시회 등
 - 세계도시 정책공유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10월)
- 우수정책 콘텐츠 개발 및 전방위 홍보 실시
 - 해외도시 정책홍보물 3종(도시계획·주택·교통) 추가 제작 및 다국어 홍보물 발간
 - 아리랑 TV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2편), 국제평가 수상 우수정책 사례집 발간

5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아시아 국제기구 허브도시 조성의 토대 마련 및 글로벌 도시 개발 어젠다 설정·실행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 추진목표

- 아시아 국제기구 허브도시 조성의 토대 마련
 - 국제기구 유치·교류 전반에 관한 용역, 포럼 등 실시, 중·장기 전략 마련
 - 국제기구 진출설명회·홍보전시회 등을 통한 시민과의 활발한 교류기회 제공
- 글로벌 도시 개발 어젠다 주도 및 정책 공유를 통한 리더십 발휘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행 및 HABITATⅢ 신도시 의제 설정 등 주도적 참여
 - 서울시 가입기구 및 국제금융기구 등을 통한 우수 정책 공유

〈김현아 의원 개선요구 사항('15. 11. 19)〉

- ▶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예산 계속비 편성 및 재단 설립 등을 통한 지속 노력 필요

□ 사업개요

- 국제기구 유치 및 서울 소재 기구 활동 지원
- 교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아젠다 설정 참여 및 우수 정책 공유
- 소요예산 : 총 1,257백만원

※ 예산사업명 : 국제회의(기구) 참가 확대 및 유치, 다자개발기구 협력 및 사업추진

□ 추진실적('15년)

- 칼폴라니연구소,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유엔협회세계연맹 유치(3개소)
- 국제회의 참가 정책공유(10건), 국제기구 협력사업(31건)
- 국내외 소재 국제기구 파견(국내10명, 해외4명)

□ 추진계획

- 아시아 국제기구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유치 환경 조성
 -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포럼 등을 통해 장기적·체계적 전략 수립
 - 서울 소재 국제기구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시민 참여 기회 제공
 - ▶ 국제기구 대표 간담회, 국제기구 진출설명회, 서울 소재 국제기구 홍보전시회
- 대내외 조직과 공조하여 집중 유치 추진
 - 중앙정부와 공조하여 기구 개소 및 유치
 - ▶ 세계은행 연락사무소(기재부, '16), 유엔식량농업기구 연락협력사무소(외교부, '16)
 - ▶ 유니세프 한국사무소(외교부, '16), 국제적십자위원회 한국사무소(외교부, '16)
 - 지역협의체 창립 : 고령친화도시 아태 지역 국제 네트워크(어르신복지과, '17)
- 세계도시개발 의제를 결정하는 HABITATⅢ 주도적 참여

《 제3차 유엔 주거 및 지속가능도시개발회의(UN-HABITATⅢ) 》

- 기간/장소: '16.10.17~20 / 에콰도르(키토), 정부, 국제기구, NGO 등 4만명 참석
 - 주요의제 :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신도시의제(New Urban Agenda) 채택
 - 프로그램 : 정부간 회의, 세계지방자치단체 회의, 도시개발 모형 전시회 등
- 대내외적 추진체계 구축, 로드맵 작성 및 시정 홍보 마케팅 준비
 - ▶ TF팀 구성('16.2월, 관련 부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CITYNET 등 참여)
 - HABITATⅢ('16.10) 참가, 서울세션 및 전시관 운영
 - ▶ 서울세션에서 주택, 도시개발·재생, 환경 등 발표, 한국관 전시 주도참여
- 서울시 가입 국제기구 및 다자개발은행 등을 통한 정책 공유
 - 서울시 가입 기구에서의 적극적인 리더십 발휘
 - ▶ 시티넷(회장도시) : 유엔HABITATⅢ 주도적 참여 및 지속가능 정책공유 국제포럼 개최
 - ▶ 세계지방정부연합(집행도시) : 세계 총회('16.10, 보고타)시 서울 세션 운영
 - ▶ 유엔HABITAT 안전도시(아태대표) : 안전도시 리딩 역할, 사무국 직원 파견
 - 다자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활동 및 사업 추진

별첨

2015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2015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 총 관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81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81	47	30	4	-
	시정·처리요구사항	28	8	17	3	-
	건의사항	24	10	13	1	-
	기타(자료제출 등)	29	29	-	-	-

시정 · 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공투센터의 역할이 요식행위에 불과함. 투자심사 내실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필요 (재정관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 역할 강화(출연금에 의한 센터 자체과제 수행방식 도입) - 타당성검증 확대(자치구, 투자기관, 출자/출연기관) 등 - 타당성검토(B/C) '1.0 미만' 및 '검토불가' 사업통과율 감소(투자심사위원회 현장심사 실시, 사업계획 적정성 분석 도입 등) - 사업부서와 공공투자센터간 타당성분석(B/C) 편차 해소(사례중심 경제성분석 가이드라인 제정, 투자심사 경제성 분석 교육 실시 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계획 수립 : '16. 2월말 ○ 2016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제정 : '16. 2월말 ○ 투자심사 실시(개선사항 일괄적용) : '16. 2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잦은 조직개편과 범위를 초과한 7개 임시기구는 제식구 챙기기, 승진정체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조직개편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향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 하여주기 바람 부서명칭은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여 주기 바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서울시 적정 조직 운용방안 학술용역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 '15. 7 ~ 11 - 수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용역결과 : 적정 실·본부·국수 22개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진단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자치부와 기구수 확대 협의 : '16. 2 ~ 3 ○ 장기적으로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 향후 꼭 필요한 경우 외 잦은 조직개편은 지양하고, 부서 명칭은 우리말 사용 등 시민이 알기 쉽도록 추진
<p>○ 투자출연기관 행정감사 시 관련부서의 모니터링이 필요 하다고 생각됨. 향후 행정감사시 관련 기관 과장 등 부서에서 출석 하고 관련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시의원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주기 바람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행정사무감사 시 소관 부서장이 출석하여 관련 지적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반영토록 하겠음(기관별 행정사무감사 일정 확정 즉시 통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서울의료원 매각관련 감정평가 비용(6억2천)만 낭비하고 있음. 신중하게 매각계획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재산을 성공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매수자의 수익성 제고 및 입찰 참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 '15년 실시한 감정평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1년간 유효하므로 '16.7.10. 이후 매각 시에는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하여야 함 ○ 또한 감정평가 후 1년 이내에 매각을 추진하여도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여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대상과 내용 변경에 따라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하여야 함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료원을 올해 매각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다시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바,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분야별 행정심판재결 기간 축소요청을 했는데, 오히려 기간이 늘어났음. 행정심판 재결에 어느정도의 기간이 필요한지 정확히 분석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법무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결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심판 운영개선 계획 수립·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행정심판3팀 신설 : 기존 2팀 9명→변경 3팀 13명(2016. 2. 4.字) - 집행정지 등 결정사건 처리절차 및 서식 간소화 : 정형화된 사건은 일괄처리하여 처리시간 단축 도모 ※ 「행정심판 운영개선 계획」(법무담당관-18776, 2015. 12. 4.), 「업무처리절차 간소화계획」(법무담당관-19967, 2015. 12. 28.) - 민생관련 행정심판 사건 처리서식 간소화 : 식품위생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등 기준이 명확한 민생관련 사건은 처리서식 간소화로 재결기간 단축 도모 ※ 「민생관련행정심판 서식 간소화계획」(법무담당관-188, 2016. 1. 6.)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결기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행정심판 운영 개선계획 효과성 분석
<p>○ 서울특별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명칭변경 요청함 (재정관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예산낭비신고센터” ⇒ “서울특별시 참여예산 홈페이지”로 명칭변경 추진 : '16.1 ○ 민간 검색포털 홈페이지 명칭변경 등록 : '16. 1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BSC성과관리 개선사항이 없음. 기초실 평가를 14년, 15년 동안 같은 기준, 같은 내용으로 바뀌지 않고 성과도 무의미한 정량평가로 일관하고 있음. 적절한 지표로 개편하기 바람 (평가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부실지표에 대한 대안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성과관리계획 대상 자문회의 실시('16.1.14)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BSC지표의 대표성 및 도전성을 제고하도록 지침 시달, 개선된 '16년 성과관리계획 수립 예정 ○ 정량적인 지표달성도 평가비중을 낮추고 정성평가 비중을 높이는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성과 평가를 강화하겠음
<p>○ 서울 전체 민간위탁사무가 2,646개나 되고 서울시만 해도 347개임. 이중 많은 민간위탁사무를 종교법인이나 대학에서 위탁받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함. 또한 시민 안전과 연관되어 시에서 직접 해야할 일 조차 민간으로 위탁하고 있는지, 제대로 평가되는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향후 이러한 문제점과 고민들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표준협약서 제정, 수탁기관 재위탁 금지조례, 감사위원회에 민간위탁 평가 전담기구 설치 등 <p>(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1월 민간위탁 개선 실무회의(1·2차) 진행(민간위탁제도 주요 개선안에 대한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수탁 및 고액사무 관리 강화(특정감사 실시 등) - 위탁사무 선정 및 적격자 심의 강화 - 위탁사무 유형별로 차별화된 평가지표 개발·적용 - 불합리·불공정한 협약내용 개선 - 수탁기관과 협치시스템 구축 - 종사자 고용안정화를 통한 근로여건 개선 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2월 민간위탁 종합개선 TF 운영 ○ '16.3월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 '16.6월 민간위탁 조례 개정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투자심사 후 30억 이상 사업비가 변경된 내역요청을 하였으나 기초실에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음. 기초실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재정관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 11. 28.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30% 이상 늘어난 사업과 심사당시 500억 이상인 사업중 계산식 $[(\text{심사 당시 총사업비}-500\text{억})\times 20/100+150\text{억원}]$에서 산정한 금액을 초과한 사업은 재심사 대상에 해당 ※ (개정 전)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50% 증가한 사업, 50% 미만 증가사업 중에서 자치구 사업은 자체심사 후 20억 이상, 시 사업은 자체심사 후 30억 이상 증가한 사업, 시 의뢰심사 후 총사업비가 50억 이상 증가한 사업만 재심사 대상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부터 투자심사 접수 시 재심사 사업대상 중 ①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사업과 ②심사당시 500억 이상인 사업중 계산식$[(\text{심사 당시 총사업비}-500\text{억})\times 20/100+150\text{억원}]$에서 산정한 금액을 초과한 사업을 별도 관리하겠음
<p>○ 시정시책연구용역 포괄비용을 편성하여 지급하지 않은 일상적 연구에 지출되고 있다고 작년에도 지적하였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시정하기 바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시책연구용역비를 활용한 학술용역 추진이 필요한 경우 '요청 사유서'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목적, 본예산 미편성 사유, 긴급성 및 중요성 근거 등 기재 ○ 요청사유에 대한 학술용역심의회 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급하고 중요한 학술용역에 한하여 시정시책연구용역비 활용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민간위탁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관행적인 재위탁, 반영구적 위탁 등 형식적인 심사로 부적정 기관에도 지속적으로 위탁되고 있음. 형식적인 개선방안이 아닌 투명한 회계처리 방안 마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1월 민간위탁 개선 실무회의(1·2차) 진행(민간위탁제도 주요 개선안에 대한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사무 선정 및 적격자 심의 강화 - 유형별 회계처리 세부기준 마련 - 장기수탁 및 고액사무 관리 강화(특정감사 실시 등) - 위탁사무 유형별로 차별화된 평가지표 개발·적용 - 불합리·불공정한 협약내용 개선 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2월 민간위탁 종합개선 TF 운영 ○ '16.3월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 '16.6월 민간위탁조례 개정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지난 14일 만민공동회 집회 중 중태에 빠진 60대 농민을 후송 하던 구급차에 물대포를 쏘서 논란이 되고 있음. 의료사각 지대인 집회현장에서 시 차원 긴급의료체계 필요. 소방본부와 함께 의논 후 체계수립해주시 바람 (총괄 : 시민건강국, 협조 : 소방재난본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위현장 구급차 근접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상자 발생시 현장 구호 실시 및 신속한 병원 이송 - 119 지도의사와 통신으로 응급처치 시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위 규모에 따라 적정거리에 구급차 배치 ○ 소방재난본부와 협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발생 시 인근에서의 치료보다는 긴급후송을 통해 인근 병원으로 환자를 이동시키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며, 이미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구급환자관리센터와 교류하여 긴급환자 이송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기 운영 중인 긴급환자이송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환자발생 상황에 가장 적합함
<p>○ 메트로,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서울시 산하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 충족 안되서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하기관은 신규채용 시 일정비율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 우리시는 산하기관 혁신과제 및 경영실적 평가지표에 장애인 고용률을 반영하여 고용 촉진을 유도하고 있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장애인 신규채용계획 수립 : 3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평생교육분야 지방자치분권이 필요한 영역을 조사요구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서울시는 ‘지방자치 서울추진단(T/F)’ 구성·운영하여 조직·재정·입법 등 분권과제 총괄 추진 → 분권과제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17개 시도 공동으로 대응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권 총괄부서인 조직담당관과 평생교육분야 소관부서인 평생교육담당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평생교육분야 지방자치분권이 필요한 영역 조사·분석
<p>○ 부서간 중복사업을 조사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고, 컨트롤 타워를 세워 정비요구(대상별, 영역별 등), 원스톱 통합체계 마련요구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간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사업별·유형별 자료 검토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중복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유형별 정비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서간 중복사업을 정비해 나가겠으며, ○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관리(e-호조)시스템에서 부서간 유사·중복사업을 점검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행정자치부)에 건의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유사 소규모 난립 사업현황을 조사하여, 규모화 할 것을 요구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간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사업별·유형별 자료 검토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중복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유형별 정비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서간 중복사업을 정비해 나가겠으며, ○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관리(e-호조)시스템에서 부서간 유사·중복사업을 점검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행정자치부)에 건의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서울시 정책사업 포함 기타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및 총평을 자료로 남겨야함(대상별, 영역별, 시기별, 시장별)</p> <p>- ‘서울시 지식정보공유 촉진 조례’ 근거함, 서울소통광장에 공개 요구</p> <p>- 사 례</p> <p>① 서울시 본청 건물의 기능상 문제점</p> <p>② 제2롯데월드 층수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p> <p>③ SIFC 건물건립, (AIG) 후, 운영 및 매각 가능성에 대한 대응전략, 서울시-AIG 협약의 문제점</p> <p>④ 서울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의 운영 및 투자자 선정 시 권한 ‘무’ 등 절차와 운영의 문제점</p> <p>⑤ 가락농수산물식품공사 현대화 사업의 문제점(설계문제, 위치선정 문제)</p> <p>(평가담당관)</p>	<p>□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 서울시 정책사업 포함 기타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및 총평의 공개는 해당부서가 ‘지식 정보공유 촉진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추진함</p> <p>※ 사례별 담당부서 현황</p> <p>① 서울시 본청 건물의 기능상 문제점(총무과)</p> <p>② 제2롯데월드 층수 인허가 과정의문제점(건축기획과)</p> <p>③ SIFC 건물건립(AIG) 후, 운영 및 매각 가능성에 대한 대응전략, 서울시-AIG 협약의 문제점(투자유치과)</p> <p>④ 서울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의 운영 및 투자자 선정 시 권한 ‘무’ 등 절차와 운영의 문제점(투자유치과)</p> <p>⑤ 가락농수산물식품공사 현대화 사업의 문제점(민생경제과)</p>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관련 미집행 예산을 '2016년 UN-NGO'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2015년 12월말까지 집행할 것을 요구 (해외도시협력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6차 UN DPI/NGO* 행사 주최측이 본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을 서울시에 검토요청 해왔으나,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기로 최종결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제66차 UN DPI/NGO 회의</p> <p><input type="checkbox"/> 회의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명 : 제66차 UN DPI/NGO 연례회의 ※ UN 본부 공보국에서 주최하는 전세계 시민사회 영역을 대표하는 UN 회의로, 2014년에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개최 전 세계 1,500여개의 NGO에서 2,600여명 참석 ○ 주 제 : 2030 Agenda & Education ○ 일 시 : '16.5.31~6.1 ○ 주 최 : UN 공보국 ○ 주최국 : 대한민국(외교부) ○ 주 관 : 유엔아카데미인팩트한국협의회, 한동대, 경희대 ○ 예 산 : 약10억 추정 </div> <p><input type="checkbox"/> 그간 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11.24 : 주최측 서울시청 방문 해도협, 관광사업과 실무협의 ○ '15.12.29 : 경희대 대외협력부총장, 외교부 UN 과장이 서울시 내방하여 시장님을 면담, 동 행사 서울개최 검토요청에 따라, 서울시 지원가능사항(관광사업과 - 4~5천만원 [환대프로그램, 관광, 회의지원],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內 사무국 공간 6개월 제공가능)을 경희대측에 전달 ※ 경희대측은 서울시에 3억 지원요청 ○ '16.1월 :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각각 2억 총 4억, 행사장 무료임대를 약속함에 따라, 주최측 경주에서 개최기로 최종결정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예산절감 성과금 지급과 관련하여 시민지급분이 미미하고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고 성과급을 받았다고 판단됨. 시민의 눈높이에서 타당한지 고민하고, 9호선 관련 성과급 등 논란이 있는 사업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환수제도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예산절감의 계량적 평가 및 검증할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니 점검해주시기 바람 (예산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성과금제의 시민참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신고 대부분이 민원성, 아이디어 수준에 그쳐 정책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바,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시민 제안·공무원 실행 성과금」 도입 - 시민 지급대상은 확대하고 심사기준은 완화, 사례금은 분기별로 지급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누구나 친근감을 갖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신고” 위주에서 “제안” 중심으로 전환 -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효과적인 홍보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시민 대표성 강화 ○ 공무원성과금 심사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직무범위내 업무에 대해선 보다 더 엄격한 평가기준 적용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구성시 시민이 참여하여 공정성 강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 세입을 늘리거나 지출 예산을 절약한 공무원 또는 시민에게 예산성과금이 제대로 지급되어 공무원 동기부여와 사기를 진작하고 시민참여를 통해 예산낭비를 줄여 재정 효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이를 위해 ①예산성과금제의 시민참여 활성화 ②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개선 ③공무원성과금 심사기준 등 다양한 방안으로 예산성과금제를 정비·개선 할 계획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은 분명히 있으나, 15년 BC1.0 이하 사업이 투심에 반영되는 것이 증가함. 공투센터 심의 결과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음 (재정관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검토(B/C) '1.0 미만' 및 '검토불가' 사업통과율 감소 추진(투자심사위원회 현장심사 실시, 사업계획 적정성 분석 도입 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계획 수립 : '16. 2월말 ○ 2016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제정 : '16. 2월말 ○ 투자심사 실시(개선사항 일괄적용) : '16. 2월~
<p>○ 투자심사와 관련 기본계획이 불충분한 것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공투센터의 타당성 검토가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재정관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검토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검토(B/C) '1.0 미만' 및 '검토불가' 사업통과율 감소 추진(투자심사위원회 현장심사 실시, 사업계획 적정성 분석 도입 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계획 수립 : '16. 2월말 ○ 2016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제정 : '16. 2월말 ○ 투자심사 실시(개선사항 일괄적용) : '16. 2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서울연구원의 국외출장보고서 표절 등 산하기관에 대한 정기적으로 견제나 관리감독 필요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출장보고서에 대하여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대시민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검토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출장 관련 기관 규정 전수조사 및 정비 권고('16. 3월)
<p>○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신고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예산성과급도 대부분 공무원들이 수급하고 있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재정관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및 캠페인 개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SNS, 블로그 및 서울사랑 홍보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낭비신고 도우미 20명 내외 구성 운영 : '16.2월~ ○ 퇴직공무원 등 활용 신고내용 구체화 검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은 잘하는 것임. 하지만 서울시 공익변호사 437명중 상담에 응하고 사건을 수임할 가능성도 있으니 불합리 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대비책 마련 필요 (법률지원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변호사 출범당시부터 상담과 연결된 사건 수임은 제한적으로 진행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수립·운영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이드라인 : 법률구조공단 등의 법률구조를 먼저 안내, 민원인이 먼저 수임을 요청한 경우,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은 수임료 산정, 계약 즉시 서울시로 수임 사실(수임료 포함) 통보 ○ 공익변호사 전용게시판에 사건 수임 내역 공지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운영 취지와 사건수임 가이드라인을 정기적으로 안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예산성과급 관련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공무원들이 당연한 업무로 성과급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지하철9호선 관련 의회특위를 구성하여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은 공무원 5명이 받았는데 이런 경우 정당하지 않음. 향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하기 바람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성과급제의 시민참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신고 대부분이 민원성, 아이디어 수준에 그쳐 정책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바,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시민 제안·공무원 실행 성과급」 도입 - 시민 지급대상은 확대하고 심사기준은 완화, 사례금은 분기별로 지급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누구나 친근감을 갖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신고” 위주에서 “제안” 중심으로 전환 -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효과적인 홍보 - 예산성과급 심사위원회의 시민 대표성 강화 ○ 공무원성과급 심사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직무범위내 업무에 대해선 보다 더 엄격한 평가기준 적용 - 예산성과급 심사위원회 구성시 시민이 참여하여 공정성 강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 세입을 늘리거나 지출 예산을 절약한 공무원 또는 시민에게 예산성과급이 제대로 지급되어 공무원 동기부여와 사기를 진작하고 시민참여를 통해 예산낭비를 줄여 재정 효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이를 위해 ①예산성과급제의 시민참여 활성화 ②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개선 ③공무원성과급 심사기준 등 다양한 방안으로 예산성과급제를 정비·개선 할 계획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대행사업, 위탁사업의 구분 관련하여 11개 자치단체는 대행사업으로 6개 단체는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시설관리공단과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사업은 대행사업으로 추진할 필요 있음. 행자부 질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 보고하여 주기 바람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12월 행정자치부(공기업과)에 서면 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이 지자체의 사업을 대행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한 사무의 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16.1월 행정자치부 방문 시 구두답변(시설공단 관계자 동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의 대행사무도 위탁에 포함 ○ '16.1월 행정자치부(공기업과, 자치제도과) 추가질의 및 회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이 지자체의 사업을 대행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과 제3항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행 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제3항 모두 적용 ○ '16.2월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에 추가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 경 : 대행이 위탁에 포함되더라도 공기업의 위탁사무는 공공위탁이므로 민간위탁 조례의 적용대상은 아님 (시설공단 측 주장) -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3년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표준조례(안) 유효 여부 · 수탁기관을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한정해야 되는지(표준조례 제2조) · 시 산하기관의 범위는 무엇인지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2월 행정자치부 회신 결과에 따라 추진방향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범위에 시 산하기관을 제외하는 방안과 산하기관 포함여부를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두는 방안 등을 종합적 검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세입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세입별 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음(취득세, 레저세 등)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바람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세입전망과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지방세 세입추계모형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년 이후 우리시 추계모델을 기반으로 행자부 시스템이 개발되어 전국 지자체가 사용 중이며, '12.12월 지방세 연구원에서 '중기 지방세수 추계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 세수 추계모델을 보완하여 현재까지 활용 중 ○ 그동안 우리시 세입추계 모형은 안정적인 성장기에는 비교적 정확한 세입추계가 가능하여 우리시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한 바가 있었음 ○ 그러나 예산편성 이후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예 : 정부 부동산 정책 변경, 외부경제 충격)가 발생한 경우 정확한 세입추계가 어려웠으며, 특히 '15년 예산 대비 징수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음 ○ 이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주택분 취득세 결정요인과 전망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제출 '15.8월, 회신 12월)하였고 '16년부터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신규 세입추계 모델을 활용예정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취득세의 세입 변동성과 경제성장율이 지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등을 연구하여 향후 보다 더 정확한 세입추계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억대연봉을 받는 버스회사 임원에 대한 일률적인 임금 지원 체계 개선이 필요함. 버스기사 채용비리 발생을 막기위해 서울시가 대신 버스 기사를 채용하는 방안 등 마련하고, 버스회사 감사선임시 서울시와 협의된 사람을 선임하여 감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및 재정지원금에 대한 철저한 사후조치가 필요함 (도시교통본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서울시가 지급하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상 임원급여는 66개사 총액 연간 약 69억원임(1인당 약 3,400만원) ○ 2015년 표준운송원가에서는 임원급여를 일부 현실화하되, 집행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버스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음 ○ 현행 법령상 민간기업인 버스회사의 운전기사 채용을 서울시가 대신하는 것은 불가능함 ○ 우리시는 버스회사의 운전기사 채용과정에서 비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버스회사 평가시 채용비리 발생회사에 대해 최대 300점을 감점하여 성과이윤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시내버스회사의 외부회계감사 선임은 「주식회사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임하고 있음 ○ 우리시는 향후 우리시와 공동으로 외부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표준운송원가 협상시 임원급여 가이드라인 마련·시행('16년부터) ○ 우리시는 버스조합과 협의를 통해 버스회사 외부감사 공동 선임 방안 시행('16년 결산분부터)

건의사항

건의사항	조치결과
<p>○ 투자·출연기관에 예산편성 지침(기준)을 시달하기 전, 산하기관의 의견을 들어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예산편성 지침과 현실의 괴리해소가 필요함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기준) 관련 의견수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기관('15.4.1.) / 출연기관('15.6.17.) ○ '16년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기준) 관련 의견제출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기관('15.4.28.) / 출연기관('15.6.26.)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기준) 관련 의견수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기관('16.4월 예정) / 출연기관('16.6월 예정)
<p>○ 시산하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정년 보장형, 정년 연장형의 내용과 대책에 대한 논의 필요함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 기관 노사합의 완료, 2016.1.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보장형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 정년연장형 :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고용 300인 미만 대상기관(2017.1.1.시행) : 노사자율교섭 지원예정 ○ 기관에서 정년연장형을 정년보장형으로 전환 원할 경우 관련규정 검토 지원 예정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청년보장제도상 활동비를 받으려면 사회활동을 수행해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취업준비에 제약을 받으므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됨. 제도 실행시 이런 부분의 검토가 필요함 (청년정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취·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자의 자기 책임과 주도에 의해 수행하는 것으로 취업준비에 제약은 없을 것으로 판단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당사자, 전문가, 복지계 등과 지원대상, 활동범위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서 기획조정실이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서울시의 조직분담체계 정비 등 제도적인 측면과 인적 측면 모두 재검토 하여 현실적으로 지방분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조직담당관)</p>	<p>□ 추진상황 : 추진중</p> <p>□ 추진내용 : 서울형 지방분권 추진체계 마련('15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 서울추진단(T/F)'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장(기획조정실장) : 조직·재정·입법 등 분권과제 총괄 추진 - 자치제도책임관(정책기획관) : 중앙·지방의 정책결정 협의체 구성, 자치기구·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등 - 재정책임관(재정기획관) :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불합리한 재정제도 개선 등 - 대외협력책임관(정무수석) : 분권과제 입법화, 지방분권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서울연구원:분권관련 현황 분석 등 콘텐츠·논리 개발) ○ '서울시 지방분권협의회'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 서울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기능 : 지방분권 추진계획 수립, 지방분권 핵심과제 등 자문 및 점검 - 구성 : 위원장(김순은 서울대 교수), 부위원장(이기우 인하대 교수) 등 언론, 시민단체, 분권 전문가 등 총 18명으로 구성 ○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서울 지방분권 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논의의 장 마련 - 일시 : 2015.10.26.~27.(장소:서울시청, 서울시립대) - 주제 : 실질적 자치조직권 실현, 주민자치를 위한 자치입법, 지방재정의 건정성 제고 등 <p>※ 일본 및 국내 분권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300여명 참석</p> <p>□ 향후계획('16년) : 지방분권 운동 본격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 서울추진단(T/F)' 지속 운영과 함께 협력채널 다각화로 지방분권 운동 활성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방분권협의회 : 타 지자체 지방분권협의회와 연대로 협치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 위원들의 주요 언론사 기고 병행 추진 ② 중앙정부 : 행자부와의 의사소통 채널 구축으로 소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인사, 재정 등 지방자치 안건 논의 및 공동 추진 ③ 서울연구원·지방행정연구원 : 연구 전문기관의 노하우 활용, 서울형 지방분권 논리 강화 ○ 시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분권 콘텐츠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지방분권' 주제로 백서·홍보영상 제작 -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의 날(10.29.) 기념행사 개최 ○ '서울시 자치영향평가제도' 본격 시행(지방분권협의회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정책 수립 이행 시 예상되는 자치구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협의·조정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출연기관(재단) 신규 추진 중인 13개 기관이 있는데, 과다하다고 판단됨. 중장기 검토를 통하여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설립검토 중인 출연기관(13개)에 대한 타당성 종합 검토 실시 : '15.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추진 : 5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재단 및 서울디지털재단 등 2개 기관 설립·운영 조례 제정 완료 - 설립보류 및 장기검토 : 8개 기관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추진 대상 : 개별 타당성 검토 실시(진행중) ○ 장기검토 대상 : 설립의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장기 재검토
<p>○ 서울시는 우수한 정책사업이 많이 있음.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으로 생각함. 그러나 SH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임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바람 (해외도시협력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 교통, 도시철도 등 주요 서울시 해외진출 사업은 도시 인프라 개발 측면에서 SH공사 기존 사업과 기능적 연계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시티 등 해외도시의 종합적 개발 추세를 고려했을 때 SH공사의 도시개발 노하우와 시 우수정책 연계 용이 ○ 민간기업과 컨소시엄 참여, SPC 출자 등 다양한 해외사업 유형을 고려할 때 해외 영리사업이 가능해야 하므로 재단법인이 아닌 공기업인 SH공사가 적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사업이 확대될 시, 독립조직으로 설립할 예정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해외도시협력담당관)와 역할분담 및 유기적 협조로 사업 수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도시정부간 G2G 협력, 사업기회 발굴 -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SH공사내) : 사업모델 개발, 수수료 산정, 컨소시엄 참여, 사업 입찰 참가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서울시는 정책수출에 지원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지않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수료 창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해외도시협력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분석·기획·컨설팅, 교육·운영관리 지원, 파이낸싱, 컨소시엄 참여 등 수주지원 활동에 따라 수수료 기준 기본방향 마련 ※ 수수료 및 컨소시엄 지분은 수주액과 기여도에 따라 프로젝트별로 민간기업과 협약에 의해 결정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제공 가능한 수주활동 자료 수집 및 분석, 유사사례 조사 등을 통해 수수료 기준 세부화
<p>○ 민간위탁업체에서도 사회적 경제 품목 중 공공구매할 수 있도록 건의함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1월~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시, 장애인·사회적기업 생산품 구매 실적을 '사회적 가치 기여' 항목에 반영 평가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2월 전 수탁기관 및 사업부서 대상으로 구매 독려 및 홍보 강화, 계약심사과 비용심사 시 사회적 가치 특성 반영 등 협의(연간 지속 추진)

건의사항	조치결과
<p>○ 10~14년 재심사 통과사업 80%가 재심사를 통과되고 부결된 20%도 결국 통과됨. 또한 753개 사업중 사업비 1000억 이상 증가 사업이 다수이며(서울시 신청사 건립, 서남권 돔 구장등). 14년 투자심사 경제성 분석시 사업부서는 2.27%인데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0.88%로 사업부서에서 타당성을 부풀리고 예산을 부풀리고 있다고 생각됨.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몇건이라도 완공 후 BC 분석을 다시 하는 것이 건의함 (재정관리담당관)</p>	<p>□ 추진상황 : 검토중</p> <p>□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결여사업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 ⇒ ‘사업계획 적정성 분석’ 도입으로 B/C 등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은 위원회 상정 前 단계에서 반려 조치 - 타당성검토(B/C 분석)는 최초 의뢰 시 1차 분석 외 수정·보완 의뢰서에 대한 2차 분석을 실시하여 보다 정밀하고 신뢰도 높은 제도 운영 도모 ○ 완공 후 B/C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C분석은 투자심사 전단계로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사업타당성 조사” 과정 중에 사업추진의 필요성, 경제적(B/C)·재무적 편익 및 정책적 타당성을 산출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 사업종료 후 매몰비용에 대한 재분석을 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 - 다만, 사업종료 전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할 경우,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타당성조사(B/C 분석) 재조사 및 투자심사 재심사토록 제도적으로 경제성분석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p>□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계획 수립 : ‘16. 2월말 ○ 2016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제정 : ‘16. 2월말 ○ 투자심사 실시(개선사항 일괄적용) : ‘16. 2월~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조정교부금 확대는 임시방편적인 조치임. 기본적으로 지방세를 높여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지방재정물을 맞춰주는 것은 일시적 눈가림일 수 있음.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지방세 확충 필요성을 건의하기 바람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정부약속 미이행분 5% 우선 인상과 복지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20%까지 인상안 주장 ○ 특히, 2015년도에는 자치구와 공동으로 '지방소비세 인상'을 자치분권 확대방안의 핵심과제로 선정·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부터 자치구와 함께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 정부 및 국회에 수차례 건의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대정부·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지방소비세 인상 및 지방세 확충을 지속건의 및 촉구

건의사항	조치결과
<p>○ 맥킨지 컨설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2차 컨설팅이 진행중인데 혁신과제별로 실행이 잘되고 있는지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람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2단계 컨설팅이 추진 중으로 완료 후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예정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p><input type="checkbox"/> 2단계 컨설팅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기간 : '15. 6.11. ~ '16. 2.10. (8개월) ○ 과업대상 : 6개 투자, 출자·출연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재단, 관광마케팅(주), SBA,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 ※ 선정기준 : 시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기능개선 및 현안문제 대안 제시 필요기관 우선 시행 ○ 과업목적 : 역할 재정립, 재무구조 개선 등 혁신방안 마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수행기관 :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엘리오앤컴퍼니 컨소시엄 </div>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계획 수립 : '16. 4월(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 책임 하에 실행 전담조직을 운영 - 추진상황 정기적으로 점검·평가(기획조정실 및 관련 실·국)
<p>○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11월 발표하였는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만드는 것을 건의함 (평가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관련하여 국회 논의 중이나, 이와는 별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에 관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중심으로 논의 예정

건의사항	조치결과																																			
<p>○ 기초실 산하 위원회 참석 자료를 보면 참석율이 저조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이름 있는 분들을 억지로 위촉했는지 등을 검토하여 참석이 곤란하다고 하면 해촉하고 다른 분을 위촉하는 등 정비가 필요함 (기획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이 저조한 위원 대상 위원회 활동 강화 요청('15.12.~'1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위원회 참석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을 대상으로 향후 회의 참석을 적극 독려(유선안내) ○ 기획조정실 위원회 운영 관련 유의사항 공문 안내('16.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위원 활동 강화 및 참석 저조 위원 교체 요청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위원회 참석을 독려하고 활동실적을 토대로 재위촉 여부를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 저조 위원에 대해서는 지속 교체 추진 																																			
<p>○ 서울형 임금피크제가 단순히 임금삭감이 아니라 청년고용 등의 효과가 있도록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 기관 노사합의 완료, 2016.1.1.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기관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 - 2015.12.15. 일자리창출 노사정 서울협약 체결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정 서울협약 실행 : 2016.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피크제 도입(891명) 등을 통해 서울형일자리(9,801명) 창출 추진 <table border="1" data-bbox="593 1787 1382 1995"> <thead> <tr> <th>구분</th> <th>합계</th> <th>2016</th> <th>2017</th> <th>2018</th> <th>2019</th> <th>2020</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9,801</td> <td>2,520</td> <td>1,995</td> <td>1,760</td> <td>1,743</td> <td>1,783</td> </tr> <tr> <td>임금피크</td> <td>891</td> <td>490</td> <td>272</td> <td>70</td> <td>52</td> <td>7</td> </tr> <tr> <td>신규사업</td> <td>5,191</td> <td>1,510</td> <td>1,025</td> <td>906</td> <td>848</td> <td>902</td> </tr> <tr> <td>정년퇴직</td> <td>3,719</td> <td>520</td> <td>698</td> <td>784</td> <td>843</td> <td>874</td> </tr> </tbody> </table>	구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9,801	2,520	1,995	1,760	1,743	1,783	임금피크	891	490	272	70	52	7	신규사업	5,191	1,510	1,025	906	848	902	정년퇴직	3,719	520	698	784	843	874
구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9,801	2,520	1,995	1,760	1,743	1,783																														
임금피크	891	490	272	70	52	7																														
신규사업	5,191	1,510	1,025	906	848	902																														
정년퇴직	3,719	520	698	784	843	874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육아기 단축근로 제도에 대한 도입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인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육아기 단축근로제에 해당하는 ‘시간제전환근무’ 기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기업의 육아기 단축근로와 같은 제도로 공공기관에서는 시간제 전환근무를 도입(‘12년), 주 40시간을 15시간~25시간으로 짧게 전환하여 근무 가능 - 아울러, 1세 미만 유아를 가진 직원을 대상으로 1일 1~2시간 육아시간 부여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전환근무 및 9to5 등 육아기 단축 근로제도 홍보 강화
<p>○ 민간위탁 평가지표 변경시 정규직 채용 배점을 높여 주기를 건의함 (조직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1월 민간위탁 개선 실무회의(1·2차) 진행 (종합성과평가 평가기준 및 지표 개선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및 인력운영’ 평가지표 배점 상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평가요소 내 정규직 채용률의 배점 및 가중치 상향 ▶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평가요소 배점 상향 등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2월 민간위탁 종합개선 TF 운영 ○ ’16.3월 종합성과평가에 변경된 지표 적용

건의사항	조치결과
<p>○ 기초실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비율 34%인데,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높여주시기 바람 (기획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여성위원 위촉을 적극 독려하여, '15.12월말 기준 여성위원 위촉비율은 40.9%임. - 우리시 위원회(중점관리대상) 중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회는 총 17개임 ※ 전체 위원 586명 : 위촉직 538명(남 318명, 여 220명), 당연직 48명 ○ 기획조정실 위원회 운영 관련 유의사항 공문 안내('16.2.4) - 여성위원 위촉비율 40% 이상 준수 독려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도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위원 위촉비율(40% 이상)을 준수해 나가겠음
<p>○ 투자출연기관 조례관련 간담회시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음. 적절한 위원으로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주기 바람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전원을 재구성하는 것은 관계 법령상 시행곤란 - 위원의 자격과 임기는 법령에서 직·간접적으로 보장 ○ 대안으로 조례상 규정된 위원회 정수(13명) 충족을 위한 추가위촉 실시 : 3명('16.2월 위촉)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촉분야 확대 : 위원회 2기 구성 시('17.6월 예정) -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적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

건의사항	조치결과
<p>○ 투자·출연기관의 고유업무 사업 외에 위탁업무/사업 및 수탁업무/사업 비율을 조정 필요 (예 : 고유사업이 80%이상, 타 기관에 의뢰한 수탁사업비 10%이내 등)</p> <p>- 위탁업무와 사업을 고유사업으로 전환 여부시 신중함인 요구</p> <p>- 업무회피성 수탁사업을 금하고, 연속적인 수탁사업이 필요한 영역에 신규채용 건의, 전문성 부족에 기인한 수탁 사업을 협력사업으로 전환 건의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출연기관 위탁사업 업무재설계 계획'(15.9.7.)에 의거, 기관의 설립목적과 기능 및 대상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수탁사업을 고유사업으로 전환 추진 중(조직담당관) ※ 투자·출연기관은 설립목적과 기능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고유사업/수탁사업/수탁사업 비율을 조정하기는 어려움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출연기관 수탁사업의 고유사업 전환실적 모니터링 실시 : '16.3월(조직담당관, 공기업담당관 공동 추진) ○ 고유사업 전환대상 사업 추가 발굴 및 전환여부 검토 : '16.4월~(조직담당관, 공기업담당관, 市주관부서 공동 추진)

건의사항	조치결과
<p>○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 위한 전담기구(재단 등) 설치 건의</p> <p>- 1년 예산 기준으로 유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신규로 국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영역 조사 및 국제회의 유치는 전문 가의 역량 및 예산확보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함.</p> <p>- 대학 혹은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준비 하기 위한 MOU 방식의 운영 검토 필요 (해외도시협력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구 현황 파악, 유치 및 교류 협력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예정 (재단 설립, 유치 관련 조직, 예산, 연구기관과의 협력 방안 포함) ○ 연구용역 예산(1억원 내외) 확보 추진 <p><input type="checkbox"/>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2월 : 용역범위, 구체적 내용을 주제로 자문회의 개최 ○ '16.3월 : 용역진행에 대한 행정절차 추진, 용역착수 ○ '16.중반기 : 중간보고회 개최 ○ '16.하반기 : 최종보고회 개최
<p>○ ASEAN, "APEC 2025" 유치노력 건의 (해외도시협력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중앙부처인 외교부(지역경제기구과)와 2025년 정상회의 개최도시 관련 정보 확보 중 - 국내 개최 도시는 2021년경 선정 예정 <p><input type="checkbox"/> 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 도시 선정(2021년 예정)까지 상당한 기일이 남아 있으므로 외교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관련 정보 확보 예정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영역별 자치구 평가지표 개발 및 인센티브 제공 사업 검토 건의</p> <p>- 에너지효율, 쓰레기 처리, 안전, 범죄율, 간판정리, 생활정보, 지역문화유산 개발보존, 관광개발 및 안내, 평생교육 등(호텔 등급매기기 사례) (행정국)</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센티브 사업별로 시 사업부서에서 자치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지표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사업부서 평가지표 선정(자치구 의견수렴) → 자치구 의견조회 → 실무위원회 개최(전문가 참여) → 심의위원회 개최(전문가 참여)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도에는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자치구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에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음
<p>○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 기관별로 상이한 조건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행자부와 협의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산하기관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노력으로 실질적인 고용창출이 가능하도록 면밀한 검토 부탁 드림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 기관 노사합의완료, 2016.1.1.시행 - 도입기관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 - 2015.12.15. 노사정 서울협약 체결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노사정 서울협약 요지></p> <p>① 청년의무고용 확대시행 ② 청년 및 고령자 창·취업 프로그램 마련 ③ 임금피크제 노사합의 ④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⑤ 직접고용확대 ⑥ 투자, 출자·출연기관 공동 채용박람회</p> </div>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정 서울협약 실행 : 2016.1.~12. - 6개 분야 13개 세부과제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신규일자리창출 (891개 ⇨ 9,801개 창출) ▶ 임금피크대상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정원이 30명 이상인 출자기관장은 3%이상 청년을 정규직고용자로 채용해야 함. 정규직고용 규정의 실효성 담보가 필요함 (공기업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4조(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에 의거, 매년 기관 청년고용실적 의회 제출(2월말) ○ '15.12.15. 체결한 '투자, 출자·출연기관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사정 서울협약'에 의거 3%이상 청년의무고용 추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실행계획(채용계획) 수립 : 2월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투출평가 컨설팅 평가 용역 중간보고서 (공기업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 민간위탁사업과 대행사업 구 분방법과 향후계획 (조직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 자치구 조정교부금 2016년 배분액 및 최근 3년간 가내 시액과 확정내시액 (자치행정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 2013~2015년 현재 예비비 지출 승인 현황 및 내역 (예산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 2012년~현재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예산대비 징수액 (오차율) 현황 (세무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 2012~2015년 법정외경비 중 의회심의시 감액 후 추경 증액된 내역 (예산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2012년부터 현재까지 명시 이월 현황 (예산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 시정주요분야 컨설팅과 관련한 계획서 및 진행경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컨설팅 추진 시 관련규정 (공기업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 2015년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시민 만족도조사) 추진경과 및 계획서 (평가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 시정주요사업 성과관리강화 사업 편성 내역, 현재 진행 중인 용역 및 향후계획 (평가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 2015년 지방분권관련 중앙 정부 건의사항 및 입법지원 내역 (조직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 청년보장제도 사전준비내역 및 서울연구원 용역관련 내역 (청년정책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 중기인력운용계획 보건복지 환경분야 증원 세부 추진계획 (조직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4)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투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관련자료 제출 (공기업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4)
○ 투자·출연기관 정년현황 및 임금피크제 관련 1차 TF 및 자문회의 결과 (공기업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 주민참여 전자투표 개요와 결과제출 (재정관리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 투자·출연기관의 최근 5년간 기금 운영내역 (공기업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 정부합동평가 평가지표 및 결과 제출 (평가담당관) 오경환 의원(시정처리 지적사항)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 투자출연기관 운영평가 평가 지표 및 결과 제출 (공기업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 최근 8년간 국가매칭사업 현황 및 평가결과 (예산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2015년도 출자·출연기관 사업 별(기본, 고유, 위탁, 수탁, 협업) 예산현황 (공기업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 해외우수정책 수출내역 및 전담조직 채용현황, 향후계획 (해외도시협력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 민생사법경찰업무관련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 유형별 적발, 처리 내용 (민생사법경찰단)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4)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체 및 TF 회의 내용 및 회의록 (평가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정부 건의규제 현황 및 협의결과 (법무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 지속가능발전연구용역 책자 및 평가 보고서 (평가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
○ 지속가능 발전 관련 공무원 교육, 시민참여 자료제출요청 (평가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4)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서울시 청사 포함 전 투자·출연기관의 조명기구 LED설치 현황 제출 (총무과, 공기업담당관)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24)
○ 민생사법경찰단 단속 시 불법판단 매뉴얼 (민생사법경찰단)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5.11.19)